

전환 담론으로서 커먼즈 : 대기과 녹지 커먼즈를 위한 이론

Commons as Transition Discourse
: A Conceptual Basis for the Study on
Atmosphere and Greenspace as Commons

2020.02.

안새롬
(특정주제연구자)

제 출 문

재단법인 숲과나눔 이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전환 담론으로서 커먼즈: 대기과 녹지 커먼즈를 위한 시론”의 최종 연구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2월 28일

연구 원 : 안새롬(특정주제연구자)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 (재)숲과나눔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결과보고서 초록

연구원	안새롬	구분	()박사후펠로우십 (○)특정주제연구자
연구제목	한글	전환 담론으로서 커먼즈: 대기과 녹지 커먼즈를 위한 시론	
	영문	Commons as Transition Discourse: An Conceptual Basis for the Study on Atmosphere and Greenspace as Commons	
연구기간	2019. 03. 01. ~ 2020. 02. 28.		
색인어	한글	커먼즈, 커먼즈 이론, 전환, 대기 커먼즈, 녹지 커먼즈	
	영문	Commons, Commons Theory, Transition, Atmosphere as Commons, Greenspace as Commons	

○ 결과보고서 요약

○ 전환 담론으로서 커먼즈 이론 고찰

- 커먼즈의 역사적 의미와 커먼즈를 설명하는 주요 용어 소개
- 커먼즈 이론을 기술적, 수정적, 변혁적 패러다임으로 정리
- 커먼즈 비극론/드라마론/이중운동론, 자유주의/공화주의/사민주의/자율주의 커먼즈론 등이 전환 담론으로서 갖는 가능성과 한계 분석

○ 대기 커먼즈의 의미와 쟁점 분석

- 대기 관리 방안과 대기를 이해하는 주요 틀 정리
- 대기를 이해하는 주요 틀의 한계 분석
- 대기 커먼즈 논의의 쟁점으로서 커먼즈와 공동체의 불일치 문제, 커먼즈의 부패 등 고찰

○ 녹지 커먼즈의 의미와 쟁점 분석

- 녹지 확보 방안과 녹지를 이해하는 주요 틀 정리
- 녹지를 이해하는 주요 틀의 한계 분석
- 녹지 커먼즈의 쟁점으로서 커먼즈에 대한 권리 해석 문제, 커먼즈와 외부의 관계 설정 문제 등 고찰

요 약 문

전환의 시대에 요구되는 담론은 현 체계가 지속불가능한 구조적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면서도 다양한 스케일에서 나타나는 전환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특정 분야 및 영역의 전환을 넘어서 장기적이고 전영역에 걸친 전환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틀을 제공하는 담론이다. 이 연구에서는 전환 담론으로서 커먼즈(communs)에 주목한다.

커먼즈는 공동체에 귀속된 혹은 공동체가 집합적으로 소유하는 ‘공동의 것’을 칭하는 말이다. 공동의 것으로서 향유되어야 할 많은 것들을 분할, 교환, 상품화하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문제의식과, 국가/시장 이분법을 넘어선 새로운 해법에 대한 요구 속에서 전환을 기획하는 많은 연구자들과 실천가들이 커먼즈라는 개념에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이 연구는 첫째, 전환 담론으로서 커먼즈 이론을 살펴본다. 커먼즈의 역사적 의미, 커먼즈를 설명하는 주요 개념인 커머닝과 커머너 등을 살펴보고, 넓은 스펙트럼으로 존재하는 커먼즈 이론들을 탐색한다. 둘째, 구체적인 현실에서 커먼즈가 전환 담론으로서 어떤 가능성을 가지는지 살펴보기 위해 ‘대기 커먼즈’와 ‘녹지 커먼즈’의 의미를 고찰한다. 최근 국내에서 중요하게 대두된 사안인 대기오염과 녹지 ‘일몰제’에 대응하는 여러 방안들을 살펴보면서 대기 커먼즈와 녹지 커먼즈가 가지는 함의와 쟁점들을 정리한다.

우선 역사적으로 존재해 온 커먼즈의 의미를 살펴보면, 커먼즈는 공동체가 집합적으로 소유하는 ‘공동의 것’을 일컫는 일상적인 용어였다. 커먼즈는 공동체라는 분할 불가능한 단위에 속해 있어 공동체 성원 개개인이 분할하여 처분하거나 이익을 독점할 수 없었다. 커먼즈는 그것이 실제로 누구의 소유인가와는 관계없이 커먼즈에 대한 공동의 권리가 인정되었다. 또 커먼즈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고 정해진 형태가 있는 것도 아니다. 커먼즈의 물리적 특성(정주성, 이동성 등), 공동체 수준의 다양성과 중층성, 사회적으로 용인된 공동의 권리들의 변화, 중첩, 충돌 등에 따라 커먼즈는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했다.

커먼즈를 설명하는 주요 개념에는 커머닝과 커머너가 있다. 커머닝은 집합적 소유 관계에 기반한 집합적 활동을 지칭한다. 무언가를 공동체가 집합적으로 소유하여 공동으로 이익을 향유하는 과정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모종의 집합적인 인식, 암묵적이거나 명시적인 규칙 및 관행 없이는 불가능하다. 커머닝은 새로운 현상이나 활동을 나타내는 개념이 아니라 커먼즈화 과정을 조명하는 개념이다. 커머너도 새로운 집단을 지칭하기 보다는 커머닝을 실천하는 주체로서 공동체를 일컫는 용어이다. 커머너는 보통의 사람들에 대하여 공동의 것을 함께 만드는 혹은 만들어 온 능동적 집합체로 조명한다.

커먼즈 이론은 다양한 갈래로 발전해 왔다. 커먼즈 이론은 생태적/사회적 커먼즈, 전통적/현대적 커먼즈, 촌락/도시 커먼즈 논의 등 커먼즈의 유형별로도 구분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구분 방식은 동일한 커먼즈를 다루더라도 커먼즈에 대하여 상이한 입장과 관점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힘들다. 여기서는 커먼즈 연구의 성격과 커먼즈의 위상에 대한 해석을 기준으로 연

구 흐름을 구분하였다. 커먼즈를 기술하고자 하는지, 커먼즈를 통해 체계를 수정하고자 하는지, 체계를 변혁하고자 하는지 등에 따라 기술적, 수정적, 변혁적 패러다임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속하는 연구 패러다임들에 대하여서는 커먼즈, 국가, 시장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기준으로 다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각이 전환 담론으로서 어떠한 가능성과 한계를 가지는지 정리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커먼즈에 대한 기술적 연구 패러다임이 있다. 이 연구들은 커먼즈가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기술하고자 하는 작업들로, 커먼즈 비극론, 커먼즈 드라마론, 커먼즈 이중운동론 등이 있다. 커먼즈 비극론은 커먼즈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기에 과도이용과 무임승차 문제로 커먼즈가 비극에 이를 것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대표적인 학자는 하딘이다. 커먼즈 비극론은 커먼즈가 비극에 이르지 않도록 국가가 강하게 규제하거나 자원에 가격을 매겨 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커먼즈 드라마론은 커먼즈가 무조건 비극이나 희극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드라마를 형성한다는 관점이다. 대표적인 학자는 맥케이, 예치슨, 오스트롬 등이다. 커먼즈 드라마론은 커먼즈 내부에 존재하는 토착 지식, 공동체 문화, 규범, 규칙 등 내적 동학에 집중한다. 커먼즈 이중운동론은 커먼즈의 내적 동학 보다는 커먼즈를 국가, 시장과의 긴장 속에서 설명하려는 흐름이다.

전환 담론으로서 커먼즈에 대한 기술적 연구는 현 체계가 지속불가능해지는 구조적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 체계 전환의 경로와 전략을 구상하는 연구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커먼즈 비극론은 커먼즈의 지속불가능의 원인을 자원의 희소성과 과도이용으로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을 둘러싼 정치경제적 맥락을 설명하기 어려운 틀이다. 커먼즈 드라마론은 공동체 내부에 충분한 자치 역량이 있다는 점을 조명하는 담론으로는 유효하지만, 커먼즈 내부 동학에 집중하다보니 커먼즈와 외부의 관계에 무관심하여 커먼즈화/탈커먼즈화의 구조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커먼즈 이중운동론은 커먼즈를 다양한 사회적 힘 관계 속에서 바라보면서 커먼즈화/탈커먼즈화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므로, 커먼즈를 통한 전환에 있어서 어떤 경로와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지 등을 다양한 맥락과 스케일에서 논의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커먼즈를 통해 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수정적 연구 패러다임이 있다. 자유주의, 공화주의, 사민주의 커먼즈 연구 흐름이 여기에 해당한다. 자유주의 커먼즈론은 커먼즈를 국가, 시장과 병렬적으로 공존 가능한 제3의 영역으로 본다. 공화주의 커먼즈론은 커먼즈를 국가, 시장과 공존하는 영역에 두지만 국가와 시장의 성격을 변형하고자 한다. 대표적인 학자는 우고 마테이, 우자와 히로후미 등이다. 이들은 사회적 기능이 인정된 커먼즈가 사유화되지 않고 모두에게 향유될 수 있도록 공공이 신탁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본다. 사민주의 커먼즈론도 국가, 시장, 커먼즈의 삼두체제를 구상하지만 P2P(동료 생산) 확대를 핵심 기제로 본다. 대표적인 학자는 바우웬스, 코스타키스이다. 이들은 시민 사회에서 P2P가 확대되고, 국가는 ‘파트너 국가’로 진화하고, 시장은 ‘윤리적 경제’로 변모하는, 삼분 전략을 기획한다. 자율주의 커먼즈론에서도 시민의 자율적 사회적 생산을 강조하지만 그것이 자본에 흡수되는 것을 경계하는 반면, 사민주

의 커먼즈론은 P2P가 자본의 일부를 이루면서도 새로운 체계를 제시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본다.

수정적 연구 패러다임의 급진화 가능성을 논의하는 흐름도 있기 때문에 체계 개혁에 초점을 두는 변혁적 연구 패러다임과의 차이가 모호한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수정적 연구 패러다임은 현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체계에 순응하거나 안주할 수 있다는 한계를 내재한다. 반면, 자율주의 커먼즈론은 체계 개혁에 초점을 둔 변혁적 연구 패러다임에 속한다.

자율주의적 맑스주의 커먼즈론은 커먼즈를 국가와 시장을 넘어서는 자율적 생산 양식으로 본다. 대표적인 학자는 네그리, 하트, 데 안젤리스 등이다. 이들은 자율적인 공동체의 등장과, 삶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의 자기 관리 및 자기 통치 바탕으로 자본의 세계와는 다른 삶 체계를 구상한다. 자율주의적 페미니즘 커먼즈론은 자본의 축적 지점인 재생산 영역을 커먼즈로 보고, 재생산 영역을 재구성함으로써 자본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고자 한다. 대표적인 학자는 카펜치스, 페데리치 등이다. 이들은 커먼즈에서 집합적으로 만들어지는 부가 자본 축적에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전환 정치 프로젝트로서 커먼즈를 바라보는 연구 패러다임은 특정 분야 및 영역의 전환을 넘어서 장기적이고 전 영역과 스케일에 걸친 전환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자유주의 커먼즈론은 국가, 시장, 커먼즈의 병렬적 삼분론을 전제하고 커먼즈 내부 영역의 지속가능성만을 이야기하므로 전 영역에 걸친 전환을 이야기하기 힘든 담론이다. 특히 자본 축적에 기여하는 상품 생산 커먼즈도 성공적인 커먼즈 거버넌스로 봄으로써 오히려 체계 유지에 일조하는 측면이 있다. 공화주의 커먼즈론은 전환에 있어 국가와 시민의 역할 및 공적 책임을 환기시키기에 중요한 전환 담론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국민국가 영역성에 갇힌 커먼즈를 중심으로 논의하기 때문에 영역 내에서 독자적 매커니즘으로 해결될 수 없는 전환의 문제는 다루기 어렵다. 시민주의 커먼즈론 국가와 시장이 커먼즈와 대립하기 보다는 커먼즈를 지원하는 새로운 모델을 구상하기에 전환의 시대에 새로운 관계성을 모색하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일부 영역에서 국가와 시장이 커먼즈와 협력적으로 공존한다 하더라도, 다른 영역에서 국가-시장이 주도하는 탈커먼즈화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시민주의 커먼즈론이 이를 묵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자율주의 커먼즈론은 공동체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가장 중요한 전환의 씨앗으로 보기에 국가/시장 접근법과는 다르게 풀뿌리 전환 담론을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율주의 커먼즈론은 어떻게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공동체의 전환 실험 스케일을 확대할 것인가의 문제를 남기고 있다.

전환 담론으로서 커먼즈는 다양한 갈래로 형성될 수 있고 각각이 가지는 강점과 한계도 있다. 이와 같은 커먼즈 이론이 현실과 접맥하는 지점을 찾기 위해 ‘대기 커먼즈’와 ‘녹지 커먼즈’의 의미를 고찰해 보았다.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중 대기 관리와 녹지 확보 문제에 대한 이론적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대기 커먼즈’와 ‘녹지 커먼즈’ 개념을 고찰함으로써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커먼즈 이론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대기를 관리하는 주요 방안은 시장화, 정부 규제, 협력 거버넌스 등이다. 시장화나 정부

규제 방안은 대기를 무주자원으로 이해하면서 ‘커먼즈 비극론’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여기서는 대기에 대한 무임승차를 문제 삼는다. 정부 규제 방안은 대기를 공공신탁자원으로 이해하면서 공화주의 접근을 취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문제는 국가가 신탁 관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다. 거버넌스 구축 방안은 대기를 공동풀에 속하는 공동관리자원으로 보면서 ‘커먼즈 드라마론’을 확장·적용 시키거나 사민주의 접근을 취하는 방안이다. 이때 문제는 정부, 기업, 공동체 간, 지역/국가 간 협력 거버넌스의 부재 혹은 부적절한 거버넌스이다.

각각의 틀은 대기오염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대기를 무주자원으로 보는 경우 시민을 독립적 의사결정자 또는 규제받는 개인으로 취급하는 한계를 가진다. 또 대기를 공공신탁자원으로 보는 경우 영역적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다. 대기를 공동관리자원으로 보는 경우에는 거버넌스의 형태에 따라 대기를 공동의 것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기능할 수도, 공공신탁자원론보다도 더 영역적이고 배타적인 방식으로 기능할 수도 있다. 시민 또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시민이 될 가능성과 ‘시민 참여’라는 미명 아래 거버넌스에 형식적으로 동원되거나 영역주의에 빠진 거버넌스 행위자가 될 위험이 공존한다. 나아가, 세 가지 틀 모두 공통적으로 대기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제도가 무엇인가에 관심을 두면서 상정하는 공동체의 대기-삶을 균질하게 취급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대기 관리 제도를 통한 대기-삶의 균등한 향상을 가정하기 때문에 대기-삶들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보여주지도, 바로 그 관계가 대기질을 악화시킨 핵심적인 요인임을 드러내지도 못한다.

대기 커먼즈는 대기를 이해하는 주요 틀이 갖는 한계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기 커먼즈 논의에 중요하게 부상하는 쟁점들을 검토해야 한다. 하나는 특정 지역 공동체와 일치하지 않는 대기 커먼즈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대기 커먼즈에 대한 가치 판단 문제이다.

대기 커먼즈와 공동체가 불일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기 커먼즈와 공동체에 대한 다층적, 관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대기를 커먼즈로 만드는 공동체가 단일하지 않고 여러 층위와 경계를 가지고 중첩되어 있다고 보는 것, 그리고 그 공동체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에너지 기반시설을 지역 공동체와 등치시키지 않고 커먼즈로 구상하는 아이디어처럼, 커먼즈를 여러 층위와 경계의 공동체 및 공동체들의 관계를 통해 이해하는 것이다.

대기 커먼즈를 어떤 기준으로 가치 판단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기질 개선에 집중할 가능성이 큰 자유주의 접근보다, 대기 커먼즈에 대해 관계적으로 접근하며 가치 판단 기준을 논의할 수 있는 자율주의 접근을 참고하는 것이 유용하다. 자율주의 커먼즈론의 ‘커먼즈의 부패’ 개념은 부패한 대기 커먼즈가 강한 배타성을 띠고 대기오염의 위험을 다른 공동체로 몰아내는 것을 경계하게 해 주고, 대기-삶들의 기생적·착취적 연결 대신 공생적 연결을 추구하게 해 준다.

다음으로, 녹지를 확보하는 주요 방안은 정부의 규제·매입, 민관 협력, 공동체 자산화 등이다. 정부의 규제나 매입 방안은 녹지를 공공신탁자원으로 이해하는 공화주의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민관 협력 방안은 자본과 국가의 협상을 통해 녹지를 확보하는 사민주의 접근으로 볼 수 있

다. 이때 녹지는 ‘윤리적 경제’의 시장 자유와 ‘파트너 국가’가 지는 책임 사이의 최적 지점에서 확보되는 최적관리자원이다. 공동체 자산화 방안은 녹지를 공동체가 자율적·자치적으로 관리하는 자원으로 보면서 자유주의 접근을 취하거나 자율주의 접근을 취할 수 있다.

녹지를 확보하는 주요 방안들은 대체로 토지에 대한 절대적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어, 토지를 교환가치를 가지는 자원으로 보면서 토지 자본의 축적 기제에 침묵하는 한계를 가진다. 정부나 공동체가 부지를 매입하는 방식은 결과적으로 녹지를 확보하는 주요한 방안임이 분명하나 그 과정에서 소유주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금전적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녹지의 일부에 대한 개발권을 민간 자본에 내어주고 나머지 토지를 보존하는 방식 또한 소유주의 절대적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시정부가 주어진 비율에 따른 분할과 처분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방식이다. 도로나 철도를 지하화 후 지상 부지를 공원녹지화 하는 방안은 지상 부지의 용익권을 지하 개발권과 맞바꾸는 방식으로서 절대적 소유권의 수직화에 해당한다. 절대적 소유권에 입각하여 녹지를 확보하는 방안들은 토지를 교환가치를 가진 자본으로 변형시키고, 토지가 자본의 증식 도구로 활용되는 것을 용인하기 때문에 특정 부지를 녹지로 확보하더라도 그 외 영역에서 토지를 통한 축적, 투기로 인한 지가 상승을 문제 삼기 어렵다. 이와 같은 기제가 유지·재생산될 경우 새로운 녹지 확보는 점차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

녹지 커먼즈는 녹지를 이해하는 주요 틀이 갖는 한계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녹지 커먼즈 논의에 부상하는 쟁점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녹지 커먼즈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녹지 커먼즈와 외부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이다.

녹지 커먼즈는 다양한 권리의 묶음이 될 수 있다. 가장 쉽게는 녹지 커먼즈를 많은 사람들이 녹지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녹지 커먼즈를 접근권, 이용권의 측면에서만 접근할 경우 녹지를 집합적으로 소유한다는 의미는 근대적 소유권 틀 안에 포획될 수 있다. 녹지 커먼즈는 소유권 측면에서 접근될 수 있고, 이때 소유권은 근대적 소유권 제도가 갖는 착취적, 배타적 성격을 극복하는 방향, 공동체의 기본적인 필요와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소유권의 내용과 의미를 새롭게 구성되어야 하는 과제를 가진다. 또 녹지 커먼즈에 대하여 참여권, 전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것은 좁게는 녹지를 공동체가 자치적으로 관리할 권리를, 넓게는 공동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녹지를 구성하고 재편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나아가 녹지 커먼즈에 대한 권리는 커먼즈를 기반으로 창출되는 공동의 부에 대한 권리까지도 의미할 수 있다.

커먼즈와 외부와의 관계에 무관심한 자유주의적 접근을 취할 경우 공동체의 자치적 관리에 집중하여 녹지 커먼즈의 의미는 협소해 질 수 있다.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의 협력으로 녹지 커먼즈를 만들 수 있다고 보는 시민주의적 접근은 다른 한편에서 녹지 커먼즈를 자본 축적의 순환 속으로 흡수할 수 있어 위험하다. 녹지 커먼즈는 녹지 자체만이 아니라 녹지를 둘러싼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체계 등 외부와의 관계 속에서 커먼즈화하는 방안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목 차

- I. 서 론 17
- II. 커먼즈 19
 - 1. 커먼즈의 역사적 의미 19
 - 2. 커먼즈를 설명하는 주요 용어 22
 - 가. 커머닝 22
 - 나. 커머너 23
 - 3. 커먼즈 이론의 갈래들 25
 - 가. 기술적 커먼즈론: 비극론, 드라마론, 이중운동론 26
 - 나. 수정적 커먼즈론: 자유주의, 공화주의, 사민주의 32
 - 다. 변혁적 커먼즈론: 자율주의 커먼즈론 36
 - 4. 전환 담론으로서 커먼즈의 가능성과 한계 38
- III. 대기 커먼즈 41
 - 1. 대기 커먼즈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41
 - 가. 대기를 이해하는 주요 틀 41
 - 나. 대기를 이해하는 주요 틀의 한계 43
 - 2. 대기 커먼즈의 쟁점 46
 - 가. 커먼즈와 공동체의 불일치 46
 - 나. 커먼즈의 부패 48
- IV. 녹지 커먼즈 53
 - 1. 녹지 커먼즈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53
 - 가. 녹지를 이해하는 주요 틀 53
 - 나. 녹지를 이해하는 주요 틀의 한계 55
 - 2. 녹지 커먼즈의 쟁점 58
 - 가. 커먼즈에 대한 권리 58
 - 나. 커먼즈와 외부의 관계 60
- V. 요약 및 결론 63
- 참 고 문 헌 67

<표 차례>

표 1. 커먼즈 연구 패러다임	26
표 2. 오스트롬의 재화 분류 틀	29
표 3. 커먼즈 연구 패러다임 별 전환 담론의 가능성과 한계	39
표 4. 주요 대기 관리 방식	42
표 5. 대기에 대한 무주자원론, 공공신탁자원론, 공동관리자원론 비교	44
표 6. 주요 녹지 확보 방식	53
표 7. 절대적 소유권과 상대적 소유권	55
표 8. 주요 녹지 확보 방식	55

<그림 차례>

<그림 1> 오스트롬의 커먼즈 체계 분석틀	30
<그림 2> 커먼즈와 환경의 상호작용	31
<그림 3> 커먼즈의 정치와 커먼즈 운동	31
<그림 4> 성숙한 P2P 생산을 통한 커먼즈 지향 경제 모델	35
<그림 5> 대기-삶의 기생적·착취적 연결	49
<그림 6> 공기청정기술이 적용된 대기-삶	50

I. 서론

‘전환’은 21세기를 대표하는 아젠다이다.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세계적 불평등, 생물다양성 감소와 멸종 등의 문제는 개선될 조짐을 보이기보다는 매우 빠르게 악화되고 있으며, 전지구적으로 심화되는 ‘생태사회적 배제(Ecosocial Exclusion, 한상진, 2017)’는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끊임 없이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지속불가능성의 시스템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는 우리 시대에 중요하고 긴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20세기 후반 전환 담론의 하나로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 부상했다. 1987년 브루틀란트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의 발간은 인류의 지속가능성과 전환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고취시켰고, ‘지속가능발전의 세 축-환경, 사회, 경제’라는 틀을 고안해냈으며 많은 후속 연구와 실천들을 양산했다. 이어 2015년 UN총회에서 새천년개발목표를 대체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달성하기로 결의하면서, 지속가능발전 담론은 세계적인 전환 담론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지속가능발전 담론은 전환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데는 성공적이었는지 몰라도 지속불가능 문제에 대한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고 있지 않아 전환의 방향성을 쉽게 상실하며,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통제가능한 문제로 봄으로써 전환의 창발성이나 역동성을 차단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이홍균, 2000). 또 지속가능발전의 세 축의 설정, 세 축의 조화와 균형 추구는 개념적 정합성 측면에서 도전받는다(Giddings et al., 2002). 특히나 지속가능성 담론은 ‘지속가능’의 홍수로 그 의미가 모호해졌는데, 이러한 모호함은 전환을 다양하게 해석함으로써 새로운 잠재력을 가지기도 하지만 이해관계에 맞게 해석함으로써 현존하는 체계를 강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할 위험이 크다.¹⁾ 전환의 긴급성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발전 담론은 현 상황을 돌파할만한 전환 담론으로 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전환의 시대에 요구되는 담론은 현 체계가 지속불가능한 구조적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면서도 다양한 스케일에서 나타나는 전환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특정 분야 및 영역의 전환을 넘어서 장기적이고 전영역에 걸친 전환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틀을 제공하는 담론이다(김민재 외, 2018).

이 연구에서는 현 상황을 돌파할만한 전환 담론으로서 커먼즈(common)에 주목한다. 커먼즈는 공동체에 귀속된 혹은 공동체가 집합적으로 소유하는 ‘공동의 것’을 칭하는 말이다. 커먼즈의 역사는 고대나 중세까지 거슬러 올라갈 만큼 오래되었지만 1970년대 말 3세대 자본주의 곧,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를 맞이하면서 커먼즈가 가지는 사회생태적 함의가 더욱 주목받기 시작했다. 공동의 것으로서 향유되어야 할 많은 것들을 분할, 교환, 상품화하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문제의식과, 국가/시장 이분법을 넘어서 새로운 해법에 대한 요구 속에서 전환을

1) 지속가능발전 담론의 한계를 지적한 글로는 이홍균(2000), 지속가능발전 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정(steering) 전략을 고안하고 있는 글로는 VoB et al. (2007) 참고.

기획하는 많은 연구자들과 실천가들이 커먼즈라는 개념에 관심 갖게 된 것이다.²⁾ 이제 커먼즈는 대안 사회의 핵심 키워드로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다양한 갈래의 논의 지형을 형성하고 있다(Jeong, 2018; 정영신, 2019; 권범철, 2020).

이 연구에서는 먼저 전환 담론으로서 커먼즈 이론을 소개하고자 한다. 커먼즈의 역사적 의미와 커먼즈를 설명하는 주요 개념인 커머닝(commoning)과 커머너(commoner) 등을 살펴보고, 넓은 스펙트럼으로 존재하는 커먼즈 이론들을 탐색할 것이다. 커먼즈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는 기술적 연구에도 여러 관점이 존재하며, 커먼즈를 전환 정치의 핵심으로 보는 연구들도 자유주의적·수정적 입장부터 자율주의적·변혁적 입장까지 다양하다. 이 글에서는 각각이 전환 담론으로서 가지는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본다.

다음으로는 구체적인 현실에서 커먼즈가 전환 담론으로서 어떤 가능성을 가지는지 살펴보기 위해, 최근 국내에서 중요하게 대두된 사안인 대기오염과 녹지 ‘일몰제’를 커먼즈의 시각에서 살펴본다. 깨끗한 대기, 충분한 녹지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경우 삶의 질의 극심한 저하, 심한 경우에는 삶의 지속불가능으로 나타난다. 때문에 대기와 녹지는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향유해야 하는 커먼즈로 볼 필요가 있다. 커먼즈 이론의 스펙트럼이 넓듯이 ‘대기 커먼즈’와 ‘녹지 커먼즈’ 또한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커먼즈로서 대기와 녹지에 대한 의미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대기오염과 녹지 ‘일몰제’에 대응하는 여러 방안들을 살펴보면서 대기 커먼즈와 녹지 커먼즈가 가지는 함의와 쟁점들을 정리할 것이다.

이 연구는 전환 담론으로서 커먼즈의 가능성과 한계를 다각도로 살펴보기에 전환에 있어 커먼즈 담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향후 커먼즈 담론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지 등을 충분히 고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다루는 대기오염이나 녹지 ‘일몰제’ 외에도 우리 사회가 당면한 복잡하고 다루기 힘든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커먼즈 담론이 새로운 이론적 실마리와 실천적인 함의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전 단계는 ‘큰 정부’를 지향하는 수정 자본주의였다. 자본주의의 역사는 국가/시장 이분법 속에서 진행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시장을 넘어서는 새로운 접근법으로서 커먼즈가 주목받는 지점을 이해하기 쉽다.

II. 커먼즈

1. 커먼즈의 역사적 의미

커먼즈는 공동체에 속하는 ‘공동의 것’을 일컫는 일상적인 용어였다(Linebaugh, 2008). 역사적으로 많은 공동체에서, 어떤 자원에 대한 접근이나 자원으로부터 얻는 이익이 공동체의 기본적인 필요나 생존에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공동체가 시장을 통하지 않고도 공동으로 자원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집합적으로 소유하는 방식이 등장했다. 개인이 소유하지 않더라도 생계 자급에 필요한 것들을 취할 수 있었던 중세 영국의 산림(Linebaugh, 2008), 캐나다 선주민이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고수하는 기반으로서 공동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숲과 바다(백영경, 2017), 마을 거주민들이 집합적으로 소유한 제주 공동목장(윤순진, 2006; 최현, 2013)과 마을을 ‘물공동체’로 구성하는 공동우물(문경미, 2015) 등.

‘집합적 소유(collective ownership)’는 여타 소유 방식과 커먼즈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여기서 집합적 소유란 자원이 공동체라는 분할 불가능한 단위에 속해 있어 공동체 성원 개개인이 분할하여 처분하거나 이익을 독점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커먼즈가 의미하는 집합적 소유는 어떤 자원을 다수가 공동 소유 즉, 공동재산(common property)으로 소유하는 방식과는 큰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현행법상 ‘공유’는 공동 재산으로서 소유를 의미한다. ‘공유’는 2인 이상이 물건을 지분에 의해 소유하는 관계를 일컫는데(민법 제262조 제1항) 성질상 단독 소유자인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에 따라 사용하고 수익을 낼 수 있으며(민법 제263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68조). 현행법상 공유물은 사유재산권을 행사하는 개개인이 모여 있는 집합으로 구성되기에, 분리불가능한 공동체의 집합적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커먼즈와는 상이한 방식이다. 공동 소유가 근대 사유 재산제도에 입각한 소유자의 증가를 의미한다면 커먼즈의 집합적 소유는 ‘소유’의 근대적 의미 자체에서 벗어난 것이다(고병권, 2007). 소유권이 귀속될 특정한 주체나 지분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커먼즈는 공동의 결의나 규약에 따라 사용·관리하고 이익을 향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³⁾

요컨대 커먼즈는 공동체가 공동으로 이익을 향유하는 한 방식이다. 공동체가 무언가를 집합적으로 소유함으로써 즉, 커먼즈를 기반으로 공동의 이익을 향유함으로써 공동체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고 고유의 삶의 방식을 형성해 나가는 것은 인클로저(enclosure) 이전의 공동체에게

3) ‘공유’에 대한 국내의 법행정적 용례와 혼동을 피하고자 국내 대표적인 커먼즈 연구 그룹인 제주대학교 SSK연구단은 커먼즈를 번역함에 있어 ‘공유’ 대신 ‘공동’으로 쓰거나 번역하지 않고 ‘커먼즈’로 표기한다. 한편, ‘공유’와 대조적으로 ‘총유’ 개념은 커먼즈와 유사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어 커먼즈 연구에서 다수 참조되고 있다. ‘총유’는 우리나라 민법에 남아있는 개념으로,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은 다수가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결합되어 집합적 관계로서 소유하는 방식을 일컫는다(민법 제275조 제1항). ‘총유’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五十嵐敬喜(2014), 박태현과 이병천(2017), 윤여일(2018) 등 참고.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었다.⁴⁾

커먼즈는 그것이 실제로 누구의 소유인가와는 관계없이 커먼즈에 대한 공동의 권리(common rights)가 인정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커먼즈 역사학자 피터 라인보우에 따르면, 중세 영국의 보통 사람들은 산림을 공동의 것으로 선언하고 있는 산림헌장(Magna Charta de Foresta)에 따라 산림이 누구의 소유인지와 관계없이 산림에 접근하고 그 이익을 누릴 권리, 이를테면 생계자급을 위해 숲에 돼지를 방목할 권리, 산에서 목초나 돌, 꿀을 취할 권리 등을 보장받았다(Linebaugh, 2008).⁵⁾ 또 조선 시대에 ‘공리지(公利地)’로 선언된 산림과 하천, 바다는 왕토사상에 따라 법적으로 왕의 소유였으나 조선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향유라고 그 이익을 누릴 권리가 보장되었으며 사점이 엄격하게 금지되었다(윤순진, 2012).⁶⁾ 조선 후기,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산림공유사상이 약화되고 산림의 분할과 사점이 진행된 시기에도 일부 지역 공동체는 ‘송계’, ‘금송계’ 등 계(契) 형식으로 산림을 공동체에 귀속시켜 공동으로 이익을 향유했다(윤순진, 2012). 커먼즈는 공동체 소유의 자치적 공동 관리에서 국공유지⁷⁾나 사유지의 공동체적 이용까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어(홍덕화, 2018) 그것이 법제도적으로 누구의 소유인지 보다는 커먼즈에 어떠한 공동의 권리가 인정·실천되고 변동하는지, 공동의 인식과 실천이 어떻게 커먼즈를 구성·재구성하는지, 이에 따라 커먼즈와 공동체가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지 등이 논의의 중심이 된다(정영신과 백영경, 2015; 정영신, 2017; 2018; 김선필, 2018).

주의할 것은 커먼즈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커먼즈는 자원의 객관적 속성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원에 대한 어떤 관행과 권리, 실천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지가 커먼즈를 구성하는 데 결정적이다(최현, 2016).⁸⁾ 게다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공동의 권리라는 것은 공동체 내부의 상황, 공동체 외부로부터의 사회정치경제적 영향 등으로 인해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고, 커먼즈의 중층성으로 인해 다양한 공동의 권리들이 복잡하게 얽혀있기도 하다. 역사·생태적 커먼즈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를 집적한 아키미치 토모야(2007)는 커먼즈를 크게 로컬 커먼즈(local commons), 퍼블릭 커먼즈(public commons), 글로벌 커먼즈(global commons)로 구

4) 상당수의 커먼즈는 인클로저를 겪으며 해체되었는데, 예컨대 제주 공동목장은 1960년대 이후 제주의 관광지 개발과 함께 빠르게 감소하였고(윤순진, 2006). ‘공수(公水)’로서 마을에 속했던 물은 생수로 상품화되며 해체되었다(김선필, 2013).

5) 영국의 산림헌장은 대헌장(Magna Charta)과 짝을 이루는 문서이다. 산림헌장은 근대적 사유재산제도를 기반으로 한 자유시장주의 물결에 따라 역사 속에서 거의 사장되었으나 당시 산과 숲이 커먼즈로 인정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서이다(Linebaugh, 2008).

6) 조선은 건국 초기 ‘산림과 하천, 바다는 온 나라 백성이 이익을 누리는 곳’(山場水梁一國人民公利地, 山林川澤與民公利地)이라는 사상을 건국이념으로 내세웠다(윤순진, 2012).

7) 우리나라에서 중앙정부 소유의 땅은 국유지, 지방정부 소유의 땅을 공유지로 구분하는데, 이때 ‘공유(公有)는 국가 소유의 땅을 의미한다.

8) 황진태(2016)는 커먼즈의 사회적 속성에 주목하자는 최현(2016)에 대하여 자원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물질성마저 모두 사회적인 것으로 환원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최현(2016)은 자원의 객관적 속성에 ‘만’ 근거하여 커먼즈를 분류하는 경제학 틀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커먼즈에 작동하는 ‘사회적 용인가능성’을 부각시킨 것이다. 커먼즈의 물리적 속성과 사회적 속성 사이 상호작용을 살펴봄으로써 커먼즈의 작동 방식이 구체화될 수 있다는 황진태(2016)의 주장이나 커먼즈의 객관적 분류 틀을 비판하면서 ‘사회적 용인가능’한 관행을 강조한 최현(2016)의 주장은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분 하였다. 그에 따르면 한 자원에 대하여서도 지역, 국가, 지구 수준에서 공동의 권리가 중층적으로 주장된다. 예를 들어 야생동물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해 국가/세계 유산으로 지정되는 산림은 퍼블릭/글로벌 커먼즈로 평가할 수 있지만 그 산림을 오래 전부터 이용해 온 지역 주민들은 로컬 커먼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또, 어떤 로컬 커먼즈는 다른 공동체의 로컬 커먼즈와 일부 중복되면서 커먼즈의 구획 설정을 두고 권리 다툼이 발생하기도 하며, 인류 전체에 소속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물은 산에서 바다로 흘러가기까지의 과정에서 물의 이용·점유 관계에 따라 퍼블릭 커먼즈, 로컬 커먼즈 등으로 변모한다(秋道智弥, 2004).

정리하면, 커먼즈는 공동체가 집합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일컫는다. 커먼즈에 대하여 공동체는 분리불가능한 공동의 권리를 가진다. 커먼즈의 물리적 특성(정주성, 이동성 등), 공동체 수준의 다양성과 중층성, 사회적으로 용인된 공동의 권리들의 변화, 중첩, 충돌 등으로 인해 커먼즈는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

2. 커먼즈를 설명하는 주요 용어

Rowe(2010)는 우리 사회에서 커먼즈에 대한 인식이나 논의가 미흡한 이유가 커먼즈의 생성, 변동, 유형 등을 설명할 수 있는 고유의 용어가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커먼즈 연구 분야에서 커먼즈 관련 용어나 개념을 복원, 개발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그 중 널리 사용되는 용어로는 커머닝(commoning), 커머너(commoner) 등이 있다.

가. 커머닝

커먼즈의 어근인 커먼(common)은 공동체에 귀속된 집합적 소유물을 지칭할 뿐만 아니라 집합적 소유 관계에 기반한 여러 양상을 표현하는 형용사 및 동사였다. 하지만 현재는 형용사나 동사 용법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Linebaugh, 2008; 연구공간L, 2012). 예를 들어 현재 ‘커먼로(common law)’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법이라는 의미에서 ‘보통법’, ‘관습법’으로 풀이되지만 집합적 소유 관계에 기반을 둔 법이라는 의미는 가지고 있지 않다. 마찬가지로 ‘커먼피플(common people)’은 집합적 소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칭하기보다 ‘평민’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나아가 집합적 소유 관계에 기반을 둔 활동을 나타내는 동사로서 ‘커먼하다(common)’와, 동명사형인 ‘커머닝(commoning)’은 옥스퍼드 사전에 등록되어 실제로 사용된 바 있으나 1800년대 이후 용례를 찾기 힘들다((Linebaugh, 2008).

‘커머닝’을 복원하고 대중화하는데 기여한 사람은 커먼즈 역사가 라인보우이다. 그는 ‘커먼’이 특정 사물이나 자원일 뿐만 아니라 관습적인 활동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에드워드 코크(Edward Coke)를 인용하면서, 집합적 소유 관계에 기반한 관행적이고 집합적 활동을 지칭할 때 ‘커머닝’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다(Linebaugh, 2008: 112).

사실 커머닝은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커먼즈에 필연적으로 포함되는 개념이다. 커머닝 없는 커먼즈는 없기 때문이다(Boiller, 2014). 커먼즈 즉, 공동체에 귀속된 것은 공동체가 그렇게 만들지 않고는 저절로 생겨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종종 커먼즈는 ‘이미 거기에 있는’ 혹은 ‘주어진’ 것이라고 오인된다. 그러나 무언가를 공동체가 집합적으로 소유하여 공동으로 이익을 향유하는 과정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모종의 집합적인 인식, (암묵적이든 명시적이든) 규칙 및 관행 없이는 불가능하다. 대기, 바다와 같은 자연물조차도 커머닝을 통해서만 커먼즈로 존재할 수 있다. ‘커머닝’은 새로운 현상이나 활동을 나타내는 개념이 아니라, 커먼즈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구성되는 점을 상기시킴으로써 공동체의 지속적이고 집합적인 실천에 주목할 수 있게 한다. 커머닝은 바로 그 커먼즈화 ‘과정’을 조명하는 개념이다(한상진, 2018).

그래서 커머닝을 중심으로 커먼즈를 분석한 연구들은 커먼즈의 역동성과 독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김자경, 2017; 윤여일, 2017). 이 연구들은 커먼즈화(commonification) 과정에서 공동체

에 작동하는 권력 관계와 긴장, 인식과 실천의 충돌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커먼즈에 이상화된 경로나 제도, 목록화된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커머닝과 디커머닝(decommoning)의 이중 운동’(정영신, 2019) 속에서 커먼즈가 독특하게 구성되어 간다는 점을 잘 드러낸다. 나아가 ‘커머닝’은 커먼즈의 변혁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Hollender, 2016).

나. 커머너

커머너는 커머닝의 주체를 지칭한다. 공동체에 속하는 커먼즈는 공동체가 그렇게 만들지 않고는 저절로 생겨날 수 없는데, 바로 그 공동체를 ‘커머닝하는 자들’이라는 의미에서 커머너라고 부른다. ‘커머너’도 ‘커머닝’과 마찬가지로 커먼즈에 포함되는 개념이다.⁹⁾

커머너는 새로운 집단을 지칭하기 보다는 공동체가 실천하는 커머닝의 측면을 부각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주 강정마을에서 ‘구럼비’라 불리는 바위는 마을 공동체가 집합적으로 소유하는 커먼즈였다. 마을 주민들은 오랜 기간 동안 ‘구럼비’를 동네 마당이자 놀이터이자 쉼터이자 성소로 사용했으며, 그들에게 구럼비는 마을 문화의 일부를 차지하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였다(윤여일, 2017). 이들을 마을 주민, 마을 공동체 등으로 부를 수도 있겠지만, 구럼비라는 커먼즈를 형성해 온 주체라는 의미에서 커머너 혹은 커머너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을 ‘커머너’로 지칭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는 구럼비라는 커먼즈를 ‘자연’적으로 주어진 사물이 아니라 커머너가 커머닝이라는 지속적, 집합적 과정을 통해 생산한 사회적 산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커머너’는 보통의 사람들에 대하여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주민’ 집단이라기보다 마을 공동의 것을 함께 만드는(만들어 온) 능동적 집합체로 조명한다.

커머너는 공동의 부를 어떻게 사용하고 돌보아야 할지 공동으로 선택하고 규정하는 공동체로서(Caffentzis & Federici, 2014) 집단적으로 자기변형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다(Hart & Negri, 2009: 253). 이처럼 능동이고 집합적인 주체로서 커머너는, 한상진(2018)의 적절한 지적처럼, ‘하나 뿐인 지구’ 담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 뿐인 지구에서 다른 세계 만들기’로 생태 논의를 이동시켜 능동적인 생태적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하나 뿐인 지구’ 담론은 자원의

9) 커먼즈 개념 안에 커머너와 커머닝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 커먼즈, 커머너, 커머닝으로 구성된 체계 자체를 커먼즈로 보려는 시도도 있다. 많은 커먼즈 논자들이 이야기하듯이, 분명히 커먼즈는 커머닝과 커머너를 전제하는 개념이며 커먼즈, 커머너, 커머닝의 체계 속에서만 커먼즈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특히나 ‘공동자원’처럼 커먼즈를 자원으로 보게 되는 경우, 커먼즈가 커머너들의 삶 자체를 구성·재구성하는 측면을 간과하고 이용 대상으로 한정하게 되므로 커먼즈를 ‘공통장’, ‘공통계’(권범철, 2019), ‘공동자원체계’(장훈교, 2019)로 번역한 시도들은 일면 타당하다. 그러나 필자는 커먼즈를 공동의 ‘무엇(thing)’을 지칭하는 용어로 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부모’라는 개념 안에 부모-자식의 관계가 함축되어 있다고 해서 부모-자식 관계 자체를 ‘부모’라고 부르기 어렵듯이, 커먼즈가 커머닝과 커머너를 함축하는 개념이라고 해서 그것들을 통틀어 커먼즈라고 부를 때 야기되는 혼란스러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국 학계는 여전히 커먼즈의 번역어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며 필자도 적절한 번역어를 찾아가는 단계에 있다. 이 글에서 커먼즈의 번역은 유보하기로 하였다.

부족이라는 현 상태에 초점을 두면서 바로 그러한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힘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지를 구체화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는 데 비해 커머너가 주체가 된 '하나 뿐인 지구에서 다른 세계 만들기'는 자본과 국가의 힘에 의해 탈커먼즈화 과정을 문제 삼으면서 커머닝을 실험하는 과정일 수 있다.

3. 커먼즈 이론의 갈래들

커먼즈는 종종 과거에만 존재한 독특한 소유 방식 혹은 전근대적이고 구시대적인 유물로 취급되곤 한다. 그러나 수많은 현대 커먼즈에 대한 보고는 여전히 커먼즈가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방증한다(Boillier & Helfrich, 2015). 최근에는 커먼즈의 현대적 이해와 함께 커먼즈의 영역을 현대적으로 확장시키려는 시도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최현 외, 2019).

커먼즈가 여전히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커먼즈 논자들이 지적하고 있듯이(Caffentzis, 2014; Fedefichi, 2011; Bollier, 2014; 정영신, 2019),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공동의 것으로서 향유되어야 할 많은 것들을 분할, 교환 가능한 자본으로 변형시키고 상품화하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문제의식이다.¹⁰⁾ 대기, 바다, 산림, 물, 먹거리, 의료, 돌봄 등 공동체 삶을 지탱하는 것들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향유할 권리가 박탈되는 상황에 대하여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시장의 인클로저 운동은 플랫폼, 지식 등 디지털 세계와도 접목되면서 상품화의 범위와 속도를 증폭시키고 있다(이광석, 2020). 또 다른 이유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항하는 국가주의 모델이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산주의를 포함한 국가주의 모델은 국가와 시장의 이분법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제3의 길의 가능성을 차단한다. 또 국가의 이름으로 커먼즈를 탈취하거나, 국가가 커먼즈의 상품화를 촉진한 수많은 사례들을 고려하면¹¹⁾ 국가-시장의 틀을 넘어서는 커먼즈를 사유하는 새로운 이론이 요구되는 것이다.

근래 커먼즈 논자들은 커먼즈를 현 시스템으로부터 탈출하는 배아로 바라보기도 하고(De Angelis, 2017; Hart & Negri, 2009; Caffentzis & Federici, 2014), 국가와 시장이 커먼즈를 지원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상하기도 한다(Bauwens et al. 2017). 커먼즈를 조금씩 다르게 해석하고 있지만 커먼즈 이론은 공통적으로 어떻게 신자유주의 국가-시장을 넘어설 것인가, 어떤 새로운 시스템이 가능한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새로운 정치 혹은 전환 정치의 핵심으로서 커먼즈를 바라본다.

커먼즈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커먼즈를 전환 정치의 키워드로 바라보는 연구 패러다임에 앞서,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되어 온 기술(記述)적 커먼즈 연구 패러다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들은 사고실험, 민속지 등을 통해 커먼즈가 작동하는 매커니즘을 밝히고자 했던 작업들로, 이후 수많은 커먼즈 연구의 기반이 되었다. 사고실험을 통해 커먼즈가 비극에 이를 것이라고 본 하딘(Hardin), 희극과 비극을 오가는 커먼즈에 대한 다양한 민속지 연구들, 커먼즈의 드라마를 바탕으로 커먼즈 비극론을 경험적으로 반박한 오스트롬(Ostrom) 그룹 등이 여기에 속한다.

10) 국내 커먼즈 논의가 가지는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서술한 내용이다. 시간적, 공간적으로 다른 맥락에 있는 커먼즈 논의는 그 출발점과 문제의식이 다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 장에서 정리한 커먼즈론의 갈래도 국내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국내외 커먼즈 이론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임에 유의해야 한다.

11) 국가 주도의 강력한 개발주의 정책으로 해체된 커먼즈 사례는 국내에도 다수 존재한다.

기술적 연구 패러다임에 비하여 수정적·변혁적 연구 패러다임은 시스템 전환에 보다 관심이 있으며, 커먼즈를 전환 정치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인다. 국가, 시장과의 공존 가능성, 협력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체계 수정적 연구 패러다임과 다르게 체계 변혁적 연구 패러다임은 커먼즈가 국가-시장 시스템을 넘어서고자 하는 데에 차이가 있다.

아래에서는 커먼즈를 기술하고자 하는지, 커먼즈를 통해 체계를 수정하고자 하는지, 체계를 변혁하고자 하는지 등에 따라 기술적, 수정적, 변혁적 패러다임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속하는 연구 패러다임들에 대하여 커먼즈, 국가, 시장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기준으로 다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표 1. 커먼즈 연구 패러다임

성격	패러다임		커먼즈에 대한 해석 (국가, 시장과의 관계)	주요 연구자 및 연구 그룹
기술적	커먼즈 비극론		국가나 시장이 필요	하딘(Hardin)
	커먼즈 드라마론		국가, 시장과 별도	맥케이(McCay), 애치슨(Acheson), 오스트롬(Ostrom)
	커먼즈 이중운동론		국가, 시장과 긴장	수정적·변혁적 연구 그룹(자유주의 제외)
수정적	자유주의 커먼즈론		국가, 시장과 공존	오스트롬(Ostrom)
	공화주의 커먼즈론		국가, 시장 재구성	마테이(Mattei), 우자와(Uzawa)
	사민주의 커먼즈론		국가, 시장과 협력	바우웬스(Bauwens), 코스타키스(Kostakis), 볼리어(Bollier)
변혁적	자율주의 커먼즈론	맑스주의	자본의 내부에서 출현	네그리(Negri), 하트(Hart)
			자본의 외부	데 안젤리스(De Angelis)
		페미니즘	자본의 축적 지점	카펜치스(Caffentzis), 페데리치(Federici)

많은 경우, 커먼즈 연구 흐름을 커먼즈의 물질적 속성이나 시공간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Parker, & Johansson, 2012; Dawney et al., 2016; Boiller, 2014; 한상진, 2018). 이를테면 생태적/사회적 커먼즈, 전통적/현대적 커먼즈, 로컬(local)/어반(urban) 커먼즈 등이다. 이와 같은 구분은 커먼즈 유형에 따라 독특한 논의의 흐름이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으나, 동일하게 자연물을 다루는 커먼즈 연구라도 커먼즈에 대한 상이한 입장과 관점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힘들다. 여기서는 커먼즈 연구의 성격과 커먼즈의 위상에 대한 해석을 기준으로 연구 흐

를 구분하고 있는 Papadimitropoulos(2017), Jeong(2018), 권범철(2017; 2020), 홍덕화(2018) 등을 참조하여 커먼즈 연구 패러다임을 정리하였다.¹²⁾

가. 기술적 커먼즈론: 비극론, 드라마론, 이중운동론

1) 커먼즈 비극론

커먼즈 비극론은 커먼즈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기에 과도이용과 무임승차 문제로 커먼즈가 비극에 이를 것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커먼즈 비극론의 대표적인 학자는 하딘(Garrett Hardin)이다. 그는 <커먼즈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이라는 논문에서 개방된 목초지를 예로 들어 누구나 접근 가능한 커먼즈는 비극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Hardin, 1968). 어떤 자원에 누구나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데 자원에 감소성이 있고 이용자가 더 많이 이용할수록 얻는 편익이 크다면, 이용자들의 과도이용과 무임승차로 인해 자원은 황폐화된다는 것이다.

하딘의 글은 커먼즈에 대한 큰 관심과 논의를 촉발시켰다. 커먼즈 비극론은 많은 후속 연구를 양산하면서 커먼즈의 시장화 또는 국가 규제의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였고, 특히 제3세계 자연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명분으로 한 시장화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다(Goldman, 1998). 커먼즈가 비극에 이르지 않도록 국가가 강하게 규제하거나 자원에 가격을 매겨 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커먼즈 논자들은 하딘이 커먼즈를 무주자원과 혼동했기 때문에 커먼즈를 실패한 패러다임으로 보는 우를 범했다고 지적한다(Boiller, 2014). 무주자원은 로마법적 분류에 따르면, ‘주인이 없는 것(res nullius)’이다(Capra & Mattei, 2015).¹³⁾ 하딘은 커먼즈가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자원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세계 각지 커먼즈에 대한 인류학적, 경험적 연구들은 커먼즈에 주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주인이며, 공동체를 기반으로 비극에 치닫지 않고 관리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McCay & Acheson eds., 1987; McCay, 1995; Ostrom et al., 2002). 나아가 주인 없는 커먼즈에 대한 시나리오는 ‘커먼너 없는 커먼즈’ 혹은 ‘커머닝 없는 커먼즈’를 상정하기에 현실과 맞지 않는다. 하딘은 커먼즈를 구성하는 공동체의

12) Papadimitropoulos(2017)는 크게 자유주의와 개혁주의 흐름으로 구분한다. Jeong(2018)은 Hardin 그룹, Ostrom 그룹, 정보 커먼즈 그룹, 자유주의, 개혁주의, 반자본주의 등 6가지로, 권범철(2017)은 Bollier/Bouwens 그룹, De Angelis식 반자본주의, Negri/Hart식 반자본주의, 반자본주의 페미니즘 등 4가지로, 권범철(2020)은 재화로서 커먼즈, 공동자원 관리제도로서 커먼즈, P2P협력모델로서 커먼즈, 대안적 생산양식으로서 커먼즈 등 4가지로, 홍덕화(2018)는 자유주의, 시민주의, 자율주의 등 3가지로 커먼즈 연구 패러다임을 구분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이병천(2018)은 커먼즈론이 공동 재산과 공동의 권리에 어떤 의미와 위상을 부여하고 있는지에 따라 커먼즈론을 거버넌스론, 생산양식론, 공동 재산론, 공동권리론 등으로 구분하였는데, 공동 재산과 공동의 권리가 커먼즈에서 부상하는 핵심적인 논점이기에 유용한 구분 방식이다.

13) 로마법은 소유 방식에 대하여 주인이 없는 것(res nullius), 공동체가 소유하는 것(res communes), 국가가 소유하는 것(res publica) 등으로 구분하였다.

집단적 규범, 의사결정, 실천, 나아가 커먼즈와 공동체의 관계를 모두 소거했다(정영신, 2016; 권범철, 2020). 하딘의 시나리오에는 원자화된 개인과, 공동체와 절연된 자원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런데 사실 하딘은 커먼즈 비극론을 반박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모든 커먼즈가 무주 자원으로서 비극에 이른다고 말한 것이 아니다. 그는 인구학자로서 지구 규모의 지속가능성에 관심이 있었는데, 개방된 목초지 우화는 지구 규모의 커먼즈가 인구 문제로 인해 지속불가능할 것이라는 은유였다(정영신, 2016). 그의 맬서스주의(Malthusian)적 주장에 존재하는 한계는 차치하고, 지구 규모의 커먼즈에 한해 하딘의 논의는 설득력을 얻기도 한다. 커먼즈 비극론에 대한 반박은 대체로 지역 내에 존재하는 비교적 소규모 커먼즈 사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Araral, 2014).

커먼즈 비극론을 모든 커먼즈로 일반화하면 커먼즈가 지역에서 존재하는 방식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는다. 많은 반박 연구들이 입증하였듯이 마을, 지역 등지에서 커머너들이 구성해 온 커먼즈는 하딘의 머릿속 시나리오처럼 작동하지 않았다. 국가의 강제나 시장화가 요청될 만큼 취약하지도 않다. 그러나 매우 큰 규모의 커먼즈에 한하여, 커먼즈 비극론은 여전히 검토할만한 지점을 제공한다. 다수의 커머너가 초지역적으로 존재할 때 커먼즈는 ‘주인 없는 것’과 유사해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지구 규모에서 커먼즈화가 가능한가 등을 커먼즈 비극론과 다른 관점과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필요하다.

2) 커먼즈 드라마론

커먼즈 드라마론은 커먼즈가 무조건 비극이나 희극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드라마를 형성한다는 관점이다. 이 연구 흐름은 커먼즈에 존재하는 토착 지식, 공동체 문화, 규범, 규칙 등 커먼즈의 내적 동학에 집중한다. 맥케이(McCay), 에치슨(Acheson), 오스트롬(Ostrom) 등 커먼즈 비극론을 경험적으로 반박한 연구자들이 여기에 속한다.

맥케이와 에치슨은 세계 각지의 공동체가 커먼즈를 어떻게 자치적으로 관리하는지에 관한 인류학적 보고를 집적하고, 개방제, 사유제, 공동체소유제, 국유제 등 다양한 제도 속에서 커먼즈의 성패 사례를 추적함으로써 커먼즈 비극론에 경험적으로 반박했다(McCay & Acheson, 1987; 정영신 2016 재인용). 같은 맥락에서 오스트롬과 동료 연구자들은 커먼즈 제도에 따라 희극에 이를 수도, 비극에 이를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커먼즈의 드라마(The Drama of the Commons)>를 펴냈다(Ostrom et al., 2002).

이와 같은 연구 흐름은 공통적으로 커먼즈 민속지 연구들에 기반하고 있으며, 커먼즈를 경제학적 재화 분류 틀에 따라 구분하고, 궁극적으로는 커먼즈 제도의 (성공적) 디자인에 관심을 두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커먼즈의 개념적 경계를 분명히 하면서 커먼즈가 늘 실패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

다른 연구 패러다임과의 구분을 위해, 이 연구 흐름에서 재화로서 커먼즈가 어떻게 해석되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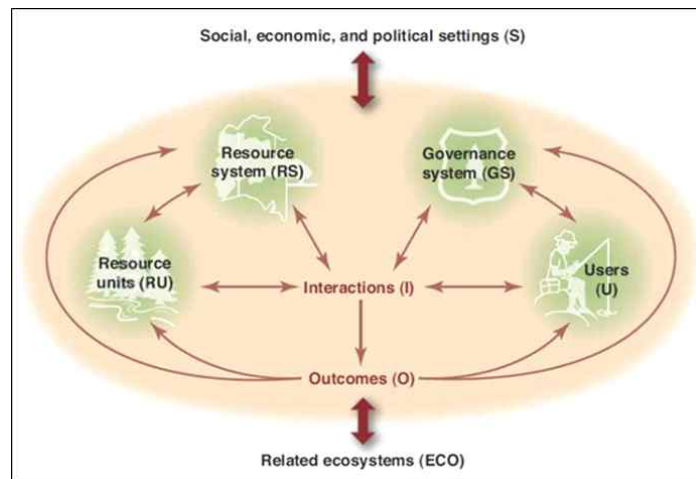
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스트롬 그룹의 연구자들에 따르면, 재화는 이용자의 접근을 배제할 수 있는가(배제가능성), 어떤 이용자의 자원 이용이 다른 이용자의 자원 이용을 감소시키는가(감소성)에 따라 구분된다.

표 2. 오스트롬의 재화 분류 틀(Ostrom, 2010)

구분		감소성(subtractability)	
		낮음	높음
(잠재적 이익의 배제가능성(exclusion))	낮음	공개재(공공재, Public Goods) 예) 공동체의 평화와 안전, 국방, 지식, 방화, 일기예보 등	공동재(Common-Pool Resources) 예) 지하수 유역, 호수, 관개 시스템, 어업, 숲 등
	높음	회원재(Toll Goods) 예) 극장, 사모임, 보육원 등	사유재(Private Goods) 예)음식, 옷, 자동차 등

이들은 커먼즈를 배제가능성이 낮고 감소성이 높은 공동재(Common-Pool Resources, CPRs)로 구분하고, 커먼즈는 자원 자체의 속성상 이용자를 배제하기 어렵고 감소성이 높아 이용자 간 경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커먼즈에 효과적인 관리 제도가 요구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해석은 커먼즈를 이용하고 관리하는 경계가 뚜렷한 공동‘풀’(common pool)을 전제하고, 커먼즈에 대한 관리와 보호의 부담을 지는 공동‘풀’의 내부 관리 규칙을 커먼즈 제도로 본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다양한 커먼즈의 성패 사례를 바탕으로, 오스트롬은 저서 <커먼즈 관리하기(governing the commons)>를 통해 커먼즈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 디자인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Ostrom, 1990). ①자원 자체의 경계와 자원을 인출해 갈 권리를 가진 개인과 가계의 경계가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함, ②자원 이용 규칙은 현지 조건과 연계되어야 하고 노동력, 금전, 물자 제공 규칙과도 부합해야 함, ③규칙에 영향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규칙을 수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 ④감시 요원은 자원 이용자 중에서 선발되거나 이용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어야 함, ⑤규칙을 위반하면 이용자 및 관리자에 의해 제재를 받음, ⑥이용자 간, 이용자와 관리자 간 갈등을 해결하는 장치가 있으며 갈등 해결 비용이 저렴해야 함, ⑦제도를 설계할 권리가 이용자들에게 있으며 외부로부터 도전받지 않음, ⑧공동자원 체계가 큰 체계의 일부일 경우, 자원의 이용, 노동력/금전/물자 제공, 감시, 운영, 분쟁 해결 등이 중층적으로 조직화됨. 즉, 잘 디자인된 공동풀의 내부 관리 제도에 따라 커먼즈를 이용한다면 커먼즈가 비극에 치달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커먼즈 비극론’의 주장처럼 국가의 강제나 사유화가 아니더라도 제3의 길, 즉 공동체를 통한 자치적 자원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Ostrom, 1990).



〈그림 1〉 오스트롬의 커먼즈 체계 분석틀(Ostrom,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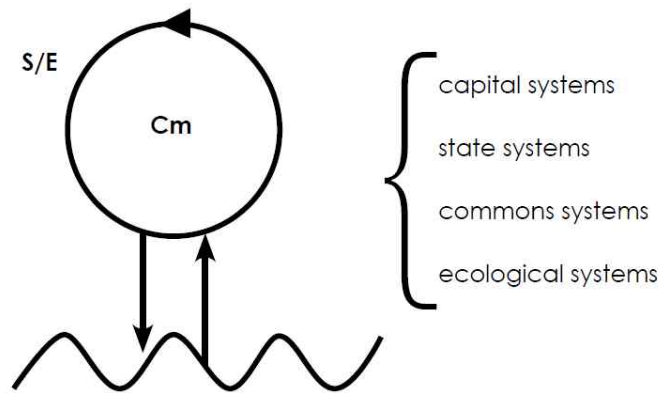
맥케이, 에치슨, 오스트롬으로 이어지는 연구 흐름은 국가와 시장의 이분법적 틀 위에 커먼즈라는 제3의 길을 제시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 커먼즈의 지속가능성에 관심을 두면서 커먼즈를 보다 효과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 분석 틀을 고안하는 성과를 거두었다(Ostrom, 2009). 그러나 한계도 분명하다. 커먼즈를 이용·관리 대상인 재화로 환원하는 문제, 커먼즈를 재화 자체의 물질적 속성을 기준으로 구분함으로써 커먼즈를 물질 자체의 특성에 따라 ‘주어진’ 것으로 취급하는 문제, 커먼즈를 성공적으로 관리하는 내부(자치) 제도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그 밖의 매커니즘을 외부 변수로 취급하는 문제 등이 주요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정영신, 2016; 최현, 2016; 이병천, 2018).¹⁴⁾

Linebaugh(2008)의 역사인류학적 연구부터 최근 커먼즈 사례 연구들에 이르기까지 커먼즈는 공동체에게 효율적 관리 대상으로서 재화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 즉, 공동체에 속함으로써 삶의 기본적 권리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 커먼즈를 다른 자원의 소유 방식과 구분되게 하는 것은 자원의 물리적 속성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규범, 규칙, 관계 등이 라는 주장(최현, 2016), 커먼즈의 지속가능성은 공동체 자치 제도 이상의, 커먼즈 자체의 변화와 정치경제적 매커니즘, 다양한 스케일의 실천들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정영신, 2016; 황진태, 2016)도 존재한다. 이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커먼즈 드라마톤에서 찾기는 어렵다. 커먼즈를 재화로서 분류한 상태에서 논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커먼즈를 단순 관리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커먼즈를 커먼즈로 만드는 결정적인 측면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기 어려운 틀이기 때문이다. 또 커먼즈를 공동체 내부 사안으로 보기 때문에 커먼즈화/탈커먼즈화의 구조적 요인을 설명하는데도 어려움을 겪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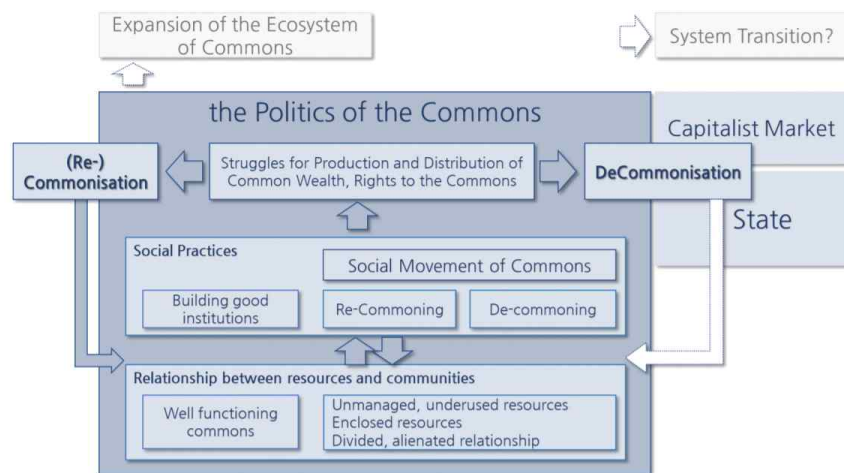
14) 오스트롬 그룹의 연구들은 소규모 지역 공동체의 자율적 규칙 형성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두면서 지역의 정치 생태계와 중요하게 상호작용하는 다른 지역의 행위자나 사건들, 지역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형성한 규칙과 중첩되어 있는 법·제도, 정치·사회·문화적 요인들은 외부 변수로 취급하고 있다 (Anderies et al., 2004; Ostrom, 2009; McGinnis & Ostrom, 2014).

3) 커먼즈 이중운동론

커먼즈의 내적 동학에 집중하기 보다는 커먼즈를 국가, 시장과의 긴장 속에서 설명하려는 흐름도 있다. 커먼즈화, 탈커먼즈화 되는 이중 운동을 다양한 긴장 관계, 힘 관계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이는 자유주의 커먼즈론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수정적, 변혁적 커먼즈 연구 패러다임의 출발점이다. 커먼즈를 포섭하려는 여러 사회적 힘들과 커먼즈 사이 긴장 구도에 대한 연구들 (De Angelis, 2006; 2017; Federichi, 2012; Capra & Mattei, 2015), 인클로저 이상의 다양한 커먼즈화 및 탈커먼즈화 매커니즘을 설명하려는 정영신(2019)의 연구, 커먼즈의 다중스케일적 접근을 제안한 황진태(2016)의 연구 등이 여기에 속한다. 앞서 살펴본 연구 흐름과 가장 큰 차이는 커먼즈의 성패보다 커먼즈화와 탈커먼즈화의 이중 운동 또는 갈등적 공진을 설명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그림 2> 커먼즈와 환경의 상호작용(De Angelis, 2017: 98)



<그림 3> 커먼즈의 정치와 커먼즈 운동(Jeong, 2018: 185)

나. 수정적 커먼즈론: 자유주의, 공화주의, 시민주의

체계 수정적, 체계 변혁적 패러다임은 대체로 커먼즈를 전환 정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바라본다. 그 중 수정적 연구 패러다임은 현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커먼즈를 활용한다. 현 시스템을 탈바꿈 내지 내파하는 씨앗으로서 커먼즈를 바라보는 변혁적 패러다임과는 차이가 있지만, 수정적 커먼즈론의 급진화 가능성을 논의하는 흐름도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모호한 경우도 있다.

1) 자유주의 커먼즈론

자유주의 커먼즈론은 커먼즈 드라마론에 기대고 있다. 커먼즈 드라마론은 국가, 시장과 별도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자치적으로 지속가능한 커먼즈의 가능성을 고찰한다. 여기에 터한 자유주의 커먼즈론에서 커먼즈는 국가, 시장과 병렬적으로 공존 가능하다. 커먼즈를 국가, 시장과 공존하는 제3의 영역으로 본 오스트롬이 대표적인 자유주의 커먼즈론자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커먼즈 드라마론의 연장선 상에 자유주의 커먼즈론이 위치하기 때문에 전환 정치 프로젝트로서 자유주의 커먼즈론이 갖는 성과와 한계도 그와 유사하다. 국가와 시장의 관리 방식 외에 커먼즈라는 새로운 길을 제시할 가능성을 보이지만, 자유주의 커먼즈론은 커먼즈가 외부가 어떤 관계에 놓여있는지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여기서 제시하는 커먼즈라는 길이 국가와 시장을 넘어서는 방식인지 오히려 현 체계를 증식하고 강화하는 방식인지 알 수 없다.

카펜치스는 커먼즈가 외부와 형성하는 관계를 두 가지로 구분한다(Caffentzis, 2004). 그에 따르면, 커먼즈는 자본 축적에 적대적이고 축적을 방해하는 관계일 수도 있고, 자본의 축적과 양립가능하거나 축적에 기여하는 관계일 수도 있다. 카펜치스는 이러한 구분에 무관심한 채 랩스터 어장, 알프스 목초지와 같은 상품 생산 커먼즈(commodity-producing commons)의 ‘성공적’ 관리를 논의하는 오스트롬 류의 커먼즈론을 강도 높게 비판한다. 사실상 자본의 순환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자유주의 커먼즈론은 커먼즈의 경계를 설정해 놓고 경계 안에 있는 자원을 어떻게 자치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가를 주로 논의하기 때문에 커먼즈를 둘러싼 체계에 대하여 커먼즈가 어떻게 대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가는 관심 밖이다(권범철, 2020).

이후에 살펴볼 공화주의, 시민주의 커먼즈론은 국가, 시장, 커먼즈의 공존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도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있으므로 주목할만하다. 공화주의, 시민주의 커먼즈론은 커먼즈와, 커먼즈가 놓여있는 체계 사이 관계를 세심하게 조정하는 이론들이다.

2) 공화주의 커먼즈론

공화주의 커먼즈론은 자유주의 커먼즈론처럼 커먼즈를 국가, 시장과 공존하는 영역에 두지만 커먼즈와 공존하는 국가와 시장의 성격(특히 국가)을 변형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다. 대

표적인 학자는 우고 마테이(Ugo Mattei), 우자와 히로후미(宇澤弘文) 등이다.

마테이는 이탈리아 커먼즈 운동의 법정정치적 함의를 이론화한 비판적 법학자이자 커먼즈론자로 알려져 있다. 마테이를 비롯한 이탈리아 비판적 법학 그룹은 커먼즈 운동과 밀접하게 결합하고 이론적 자원을 제공하면서 고유한 커먼즈론을 제창하고 있는데, 이는 2007년 이탈리아 법무부 산하 로도타위원회(Rodotà Commission)의 법 개혁안에 포함된 커먼즈 개념에서 잘 드러난다(이병천, 2018).¹⁵⁾ 여기서 커먼즈는 ①공(公)과 사(私)의 전통적 이원론을 넘어서는 범주이며, ②공동체의 기본권의 실현과 인간의 자유로운 발전에 기능적인 재화로 개념화된다. 커먼즈의 사회적 기능은 로도타위원회 커먼즈 개념의 핵심적인 부분인데, 바로 그러한 기능을 고려하여 어떤 자원이 커먼즈로 규정될 경우, ③법적 소유권이 공(公)에 있는 사(私)에 있는 일반 성원의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커먼즈의 사회적 기능을 미래까지 확장함으로써 ④미래세대까지 포함하여 커먼즈에 대한 접근권 보장을 구상하고 있으며, ⑤시민들의 사용 정도에 따라 커먼즈의 규율을 조정하고, 커먼즈에 대한 법적 보호에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로도타위원회의 커먼즈 개념을 이어받고 있는 마테이는 커먼즈를 국유(국가), 사유(시장)와 다른 제3의 영역에 두면서 삼분론을 주장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앞서 살펴본 자유주의 커먼즈론의 병렬적 삼분론과 같다고 보기는 힘들다. 마테이는 국유재가 쉽게 사유화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서 국유재의 커먼즈화를 주장하는데(이병천, 2018), 이때 커먼즈는 국유, 사유 차원과 달리 ‘사회적 기능(인간의 기본적 권리, 자유로운 발전에 기능하는 재화)’으로 구별되는 차원이기에 법적으로 국유라 하더라도 성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커먼즈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사회적 기능’의 차원에서 커먼즈를 바라보는 시각은 우자와의 ‘사회적 공통자본’론에서도 나타난다(宇澤弘文, 2005; 2015).¹⁶⁾ 그는 사회적 공통자본을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권리를 유지시키는 사회적 장치’로 정의하면서 그 예로 자연(공기, 물, 산림, 하천, 호수, 바다, 습지, 토지 등), 기반시설(도로, 교통, 상하수도, 전력, 가스 등), 제도(교육, 의료, 금융, 사법, 행정 등)를 들었다. 사회적 공통자본은 다양한 사회적 맥락과 조건 속에서 정치적 인정 과정을 거쳐 구성되는 ‘사회 전체의 공통 자산’이다. 우자와의 사회적 공통자본론의 핵심 중 하나는 그것이 사회 전체의 공통 자산이므로 국공유가 원칙이며 법적으로 국공유라 하더라도 ‘사회적 기준’에 따라 관리,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이병천, 2019 재인용). 이를 위한 대표적인 방식으로 우자와는 신탁(trust) 관리를 생각한다. 그는 신탁 관리자를 기본적으로 국가로 설정하지만 사회적 공통자본

15) 이탈리아 의회가 로도타위원회의 개혁안을 무시하고 물 사유화를 도모하자 전국적인 물 사유화 반대 흐름과 함께 물 커먼즈화를 주장하는 운동이 일어났다. 이후 2011년 국민 투표 결과 물 사유화는 부결되었다. 이탈리아에서 물은 시민의 기본적, 보편적 필요에 부응하는 커먼즈로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이병천, 2018).

16) 사실 우자와는 커먼즈를 사회적 공통자본의 논리가 적용되는 특정한 범주의 자연 자원이라고 보았다(이병천, 2019 재인용). 그는 커먼즈와 사회적 공통자본의 관계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커먼즈를 특정한 장소, 경계, 공동체가 확정된 자원으로 국한시켜 오스트롬식 정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필자는 우자와가 좁은 의미로 설정한 커먼즈 개념보다는 ‘사회적 공통자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전개한 논의가 오히려 커먼즈론과 맞닿아 있다고 본다. 특히 우자와의 사회적 공통자본론은 큰 스케일의 커먼즈, 커먼즈로서 제도 및 인프라 논의를 발전시키는 데에 중요하게 참고할 수 있다.

의 특수성에 따라 최적의 사회적 조직이 있을 수 있다고 열어둔다(宇澤弘文, 2015: 95).

마테이, 우자와 등 공화주의적 커먼즈론은 사실상 책임있는 국가론에 가깝다. 기본적으로 국유재의 민영화, 상품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깔려있으며, 커먼즈 개념을 통해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새롭게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공화주의적 커먼즈론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인정된 커먼즈는 사유화되지 않고 모두가 향유할 수 있도록 공공이 신탁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공화주의적 커먼즈론은 법적 소유권 상위에 커먼즈에 대한 기본권을 두면서 국가의 공적 역할을 촉구하고 커먼즈의 상품화를 저지할 수 있는 중요한 이론적 자원이다. 책임있는 국가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사회적 기준’을 강조함으로써 시민의 힘을 간과하지 않고 있어 민주주의 원칙도 담아내는 데 성공한다. 나아가 도시, 국가 등 다중 스케일의 커먼즈를 구상하기에 스케일 문제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자율주의 커먼즈론을 보완하는 역할도 가능하다(이병천,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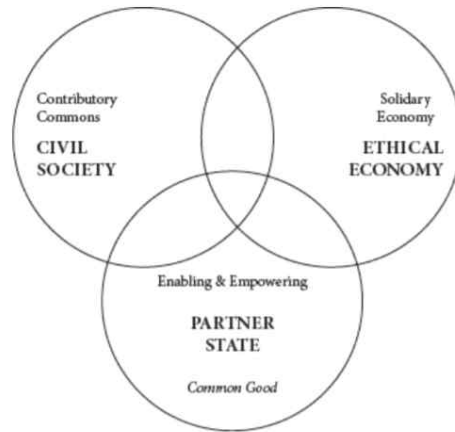
그러나 공화주의적 커먼즈론은 커먼즈 구성의 복잡성과 역동성을 소거할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커먼즈를 사회적 인정을 통해 ‘구성되는 것’이라고 봄으로써 ‘주어진 것’으로서 커먼즈 개념에서 탈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렇게 사회적으로 인정된 커먼즈에 대한 권리가 서로 충돌하고 긴장하는 경우, 여러 공동체가 중첩된 커먼즈 등은 세심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또 국가 수준의 커먼즈, 법이나 행정 영역의 개선 등을 주로 논의하다보니 공화주의 커먼즈론의 커먼즈는 대체로 국민국가의 영역성에 갇혀있다. 이를테면 이탈리아 물 사유화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를 시행하고 국가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담보함으로써 물의 커먼즈화가 가능했지만, 국가, 도시 등으로 구분되는 법행정적 영역 내에서 독자적 매커니즘으로 해결되지 않는 커먼즈 문제는 어떻게 다룰 것인가? 우자와의 경우,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하여 탄소세 징수 및 저탄소 도시 설계라는 안을 내놓고 있는데(宇澤弘文, 2015: 201) 이것 역시 국민국가 틀에서 신탁 관리자(=국가)를 활용해 해결하려는 방식이다. 대부분의 환경 문제에 해당하는 초국가적, 초지역적 커먼즈 문제를 다룸에 있어 공화주의적 커먼즈론은 스스로를 탈경계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3) 시민주의 커먼즈론

시민주의 커먼즈론도 국가, 시장, 커먼즈의 삼두체제를 구상하지만 동료 생산(peer-to-peer production, P2P) 확대를 핵심 기제로 본다는 점에서 자유주의, 공화주의 커먼즈론과 구분된다. 미셸 바우웬스(Michel Bauwens), 바실리스 코스타키스(Vasilis Kostakis)가 대표적이고, 데이비드 볼리어(David Bollier)는 공화주의와 시민주의 커먼즈론에 걸쳐있다.

P2P는 대체로 인터넷 기반의 파일 공유의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인데, 시민주의 커먼즈론에서는 시민 주도의 자율적인 사회적 생산과 상호(평등주의적) 연결이라는 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이후에 살펴볼 자율주의 흐름에서도 시민의 자율적 사회적 생산을 강조하지만 그것이 자본에 흡수되는 것을 경계하는 반면, 시민주의 흐름은 P2P가 자본의 일부를 이루면서도 새로운 체계를 제시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입장을 취한다(Bauwens, 2009).

사민주의 커먼즈론의 기획은 시민 사회에서는 P2P 생산이 확대되고, 국가는 ‘파트너 국가(partner state)’로 진화하고, 시장은 ‘윤리적 경제(ethical economy)’로 변모하는, 삼분 전략이다.



〈그림 4〉 성숙한 P2P 생산을 통한 커먼즈 지향 경제 모델
(Bauwens & Kostakis, 2014: 127)

먼저, ‘윤리적 경제’란 시장 경제(market economy)와 다르게 커먼즈가 중심이 되며 커먼즈를 지향하는 사회적, 호혜적, 연대적 경제이다. 윤리적 경제에서는 착취적 소유권이 생성적 소유권으로 이동하며, 윤리적 경제의 참여자들은 공동의 필요와 목표에 따라 개방형 상업 구조를 창출하고, 부정적인 사회적, 생태적 외부효과를 줄이며 커먼즈를 유지시킨다. 그렇다면 윤리적 경제는 어떻게 출현하는가? 또 윤리적 경제를 통해 성장을 위한 생산 경제를 폐기할 수 있는가?

사민주의 커먼즈론은 두 가지에 기대어 윤리적 경제의 출현을 이야기한다. 하나는 P2P의 잠재력이고, 다른 하나는 ‘파트너 국가’의 도움이다. P2P의 잠재력에 대하여 바우웬스는, 현대 자본주의가 P2P 활동을 유발하고 P2P에 의존하고 있지만 P2P는 단지 자본주의 체계에 내재할 뿐만 아니라 자본을 초월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한다((Bauwens, 2006). P2P는 시장 독점 지대를 축소시킬 수 있고, 생산자들 간 자유로운 협력을 가능하게 하며, 국유/사유의 틀을 뛰어 넘어 커먼즈의 영역을 재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P2P 확장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사회 운동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중요하게 요구되는 다른 하나는 기업의 이해관계에만 종속되지 않는 개혁 국가 모델인 ‘파트너 국가’이다. 바우웬스와 코스타키스에게 파트너 국가는 국가, 시장, 시민사회 삼두제의 조정자로서, 정부 규제와 시장 자유, 시민사회의 자율적 프로젝트 간 최적 혼합 지점을 찾는다(Bauwens & Kostakis, 2014). 예컨대 파트너 국가는 시민사회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되는 커먼즈를 지원하고, 공공서비스를 커먼즈화하거나, 퍼블릭-커먼즈 파트너십(public-commons partnership)을 통해 커먼즈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또 윤리적 경제 참여자들에게 도

움을 줌으로써 개방형 상업 구조를 구축하거나, 시장 경제와 윤리적 경제의 융합을 달성하기 위해 공정무역이나 사회적 기업과 같은 형태를 장려할 수도 있으며, 사회생태적으로 외부화된 비용을 내부화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제정할 수 있다(Bauwens et. al., 2017; Bauwens & Kostakis, 2014).

사민주의 커먼즈론은 P2P 기반의 삼두제가 자본의 축적 순환을 점진적으로 커먼즈의 순환으로 대체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다. 변혁적 커먼즈론: 자율주의 커먼즈론

앞서 살펴본 연구 패러다임이 현 체계를 수정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극단적일 경우 체계에 순응하거나 안주할 수 있다는 한계를 내재하는 반면, 자율주의 커먼즈론은 체계 개혁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자율주의 커먼즈론에도 맑스주의, 페미니즘 등 다양한 흐름이 존재한다. 논자들마다 강조점은 다르지만 자본과는 다른 가치 실천을 지향한다는 데에 공통점을 갖는다. 상품을 생산하기보다는 삶 자체를 생산하자는 네그리와 하트(Negri & Hart, 2009), ‘자본의 외부 되기’를 강조하는 데 안젤리스(De Angelis, 2006), 자본의 논리 밖에서 재생산 영역을 구성하자는 카펜치스와 페데리치(Caffentzis & Federici, 2014) 등.

커먼즈를 신자율주의 자본주의로부터 탈주하는 혹은 내파하는 배아로 바라보기에 자율주의 커먼즈론은 탈(脫)자본 또는 반(反)자본 커먼즈론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1) 자율주의적 맑스주의 커먼즈론

자율주의적 맑스주의 커먼즈론은 커먼즈를 국가와 시장을 넘어서는 자율적 생산 양식으로 본다. 대표적인 학자는 안토니오 네그리(Negri), 마이클 하트(Hart), 맞시모 데 안젤리스(De Angelis) 등이다. 이들은 이탈리아 자율주의 학파를 형성하고 있다. 이탈리아 자율주의는 신자율주의와의 대항 속에서 커먼즈론을 발전시킨 중요한 흐름으로 평가된다.

네그리와 하트는 커먼즈가 갖는 대안근대성(altermodernity)에 주목한다. 근대성을 넘어서면서도 반(反)근대성에 갇히지 않는다는 의미의 대안근대성은 근대성이 만든 위계적 관계에 저항하고, 고정된 정체성에 의존하는 반근대성의 정치에 도전하면서 커먼즈에 기초한 대안적인 사회관계를 창조하는 것이다(Hart & Negri, 2009: 173). 네그리와 하트가 주목하는 커먼즈는 아이디어, 정보, 이미지, 지식, 코드, 언어, 사회적 관계, 정동(affect) 등 비물질적인 것이다. 이와 같은 커먼즈는 자율적, 창조적, 집합적으로 생산되며 그 효과가 사회 전체에 부과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들은 이 비물질적인 커먼즈가 자본이라는 (출구 없는) ‘제국’을 내파할 가능성을 가진다고 본다. 자본의 세계 내부에서 커먼즈를 자율적으로 생산하고 다스릴 능력을 가진 다중(multitude)이 출현하며, 끊임없는 비물질 생산, 상품이 아닌 삶을 목적으로 하는 삶정치적 생산을 통해 자

본을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이다(Negri & Hart, 2009).

데 안젤리스는 네그리와 하트와 같이 이탈리아 자율주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네그리와 하트의 ‘삶정치적 생산’은 데 안젤리스의 ‘자본의 외부 되기’ 개념과 유사하다. 자본이 이윤을 추구하고 축적이라는 텔로스를 추구하는 힘이라면, 자본의 외부 되기는 그것과는 다르게 삶에 근거한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다(De Angelis, 2006). 데 안젤리스에게 커먼즈는 이윤 추구하고 축적을 위한 사회적 관계와는 다른 관계를 정립하며 삶을 재구성하는 장이다.

데 안젤리스가 네그리, 하트와 구분되는 지점은 그의 커먼즈론이 세계화 흐름 속 보통 사람들의 생계와 살림살이를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점이다. 그는 네그리와 하트가 창조적, 비물질 노동자를 거의 혁명의 전위로 바라보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De Angelis, 2006). 또 네그리와 하트가 커먼즈를 자본의 내부에서 출현하는 것으로 보는 반면, 데 안젤리스는 자본의 외부에 커먼즈가 존재한다고 보는 차이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측은 자율적인 공동체의 등장, 삶을 중심으로 한 자기 관리 및 자기 통치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2) 자율주의적 페미니즘 커먼즈론

자율주의적 페미니즘 커먼즈론은 자본의 축적 지점인 재생산 영역을 커먼즈로 보고, 재생산 영역을 재구성함으로써 자본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고자 한다. 대표적인 논자는 조지 카펜치스(George Caffentzis), 실비아 페데리치(Federichi) 등이다.

자율주의적 페미니즘 커먼즈론은 자본이 커먼즈에서 창출되는 부를 이용하여 축적을 시도한다는 점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이론이다. 자율주의 맑스주의 커먼즈론에서 자본과 커먼즈가 상이한 가치를 실현하는 대립 항으로 존재할 수 있다면, 카펜치스는 자본과 커먼즈가 맺는 관계에 따라 자본 축적에 기여하는 커먼즈도 가능하다고 본다. 오스트롬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상품 생산 커먼즈를 위한 공동체의 협력적 거버넌스와 창출된 공동의 부는 자본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Caffentzis, 2004). 그래서 자본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커먼즈를 재구성하여 자율적 공간으로 형성함으로써 자본 축적의 고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페데리치는 자본이 주요하게 이용하는 커먼즈가 (주로 여성의) 재생산 영역이라고 본다(Federichi, 2012).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사고 팔리는 상품인 노동력을 무상으로 재생산해주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이 기대고 있는 재생산 영역을 다르게 구성함으로써 자본을 넘어설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공동체가 재생산 영역을 통제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공간을 형성할 것을 제안한다.

요컨대 자율주의적 페미니즘 커먼즈론에서 자본을 넘어 커먼즈를 만든다는 의미는 커먼즈에서 집합적으로 만들어지는 부가 자본 축적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4. 전환 담론으로서 커먼즈의 가능성과 한계

지금까지 여러 커먼즈 이론의 흐름과 갈래를 살펴보았다. 이제 각각이 전환 담론으로서 어떠한 가능성과 한계를 가지는지 정리하여 살펴볼 차례다.

먼저, 전환 담론으로서 커먼즈에 대한 기술적 연구 패러다임은 현 체제가 지속불가능해지는 구조적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체제 전환의 경로와 전략을 구상하는 연구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커먼즈 비극론은 커먼즈의 지속불가능의 원인을 자원의 희소성과 과도이용으로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을 둘러싼 정치경제적 맥락을 보여주지 못하는 틀이다. 또 커먼즈의 비극론으로 커먼즈를 설명할 경우 국가나 시장 접근법으로 쉽게 함몰되기에 기존의 국가/시장 접근법을 넘어서는 새로운 전환 담론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다만 큰 규모 커먼즈에 한하여, 전환 담론에 중요한 과제를 제공할 수 있다. 다수의 커먼즈가 초지역적으로 존재할 때 커먼즈를 어떻게 ‘주인 없는 것’과 유사해지지 않도록 구성할 것인지, 어떻게 지구 규모에서 커먼즈화가 가능한지 등을 커먼즈 비극론과는 다른 관점과 방식으로 설명해야 하는 과제이다.

커먼즈 드라마론은 공동체에 충분한 자치 역량이 있다는 점을 조명하는 담론으로는 유효하지만, 커먼즈의 지속불가능성을 공동체 내부 요인으로 설명하기에 커먼즈화/탈커먼즈화의 구조적 요인을 설명하기 어려운 틀이다. 커먼즈와 외부의 관계에 무관심한 커먼즈 드라마론은 이에 기반한 자유주의 커먼즈론이 현 체제를 전환하기보다는 유지·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전략하게 만든다.

커먼즈 이중운동론은 커먼즈를 다양한 사회적 힘 관계 속에서 바라보며 커먼즈화/탈커먼즈화의 매커니즘을 설명한다. 커먼즈 이중운동론은 커먼즈화를 비롯한 전환의 과정에서 어떤 장벽이 존재하는지, 어떤 경로와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지 등을 다양한 맥락과 스케일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전환 정치 프로젝트로서 커먼즈를 바라보는 연구 패러다임은 특정 분야 및 영역의 전환을 넘어서 장기적이고 전 영역과 스케일에 걸친 전환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자유주의 커먼즈론은 국가, 시장, 커먼즈의 병렬적 삼분론을 전제하고 커먼즈 내부 영역의 지속가능성만을 이야기하므로 전 영역에 걸친 전환을 이야기하기 힘든 담론이다. 특히 자본 축적에 기여하는 상품 생산 커먼즈도 성공적인 커먼즈 거버넌스로 봄으로써 오히려 체제 유지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공화주의 커먼즈론은 전환에 있어 국가와 시민의 역할 및 공적 책임을 환기시키기에 중요한 전환 담론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국민국가 영역성에 갇힌 커먼즈를 중심으로 논의하기 때문에 영역 내에서 독자적 매커니즘으로 해결될 수 없는 전환의 문제는 다루기 어렵다. 많은 환경 문제가 초국가적이고 초지역적으로 나타나므로 공화주의 커먼즈론을 탈경계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사민주의 커먼즈론 국가와 시장이 커먼즈와 대립하기 보다는 커먼즈를 지원하는 새로운 모델을 구상하기에 전환의 시대에 새로운 관계성을 모색하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일부 영역에서 국가와 시장이 커먼즈와 협력적으로 공존한다 하더라도, 다른 영역에서 국가-시장이 주도하는 탈커먼즈화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민주의 커먼즈론이 이를 묵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 영역과 전 스케일에 걸쳐 사민주의 커먼즈론의 구상이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한 지점이다.

자율주의 커먼즈론은 공동체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가장 중요한 전환의 씨앗으로 보기에 국가/시장 접근법과는 다르게 풀뿌리 전환 담론을 구성할 수 있다. 또 일관되게 자본의 축적으로부터 빠져나온 커먼즈 구상함으로써 현 체계 변혁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자율주의 커먼즈론은 전환의 스케일 문제를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공동체의 전환 실험을 스케일 업(scale-up)할 것인가의 문제를 남기고 있다.

표 3. 커먼즈 연구 패러다임 별 전환 담론의 가능성과 한계

성격	패러다임	커먼즈에 대한 해석	가능성과 한계
기술적	커먼즈 비극론	국가나 시장이 필요	-국가나 시장 접근법으로 쉽게 함몰 -큰 규모 커먼즈에 대한 쟁점 제시 가능
	커먼즈 드라마론	국가, 시장과 별도	-커먼즈화/탈커먼즈화를 모두 내부 역학으로 설명하여 한계 -공동체의 역량에 주목하는 담론으로서 유효
	커먼즈 이중운동론	국가, 시장과 긴장	-커먼즈화/탈커먼즈화의 다양한 매커니즘을 설명하는 데 유용
수정적	자유주의 커먼즈론	국가, 시장과 공존	-자본 축적에 기여하는 커먼즈도 성공적 거버넌스로 보는 한계
	공화주의 커먼즈론	국가, 시장 재구성	-커먼즈화에 대한 국가와 시민의 역할, 공적 책임 환기 -국민국가 영역성에 갇힌 커먼즈가 중심이 되는 한계
	사민주의 커먼즈론	국가, 시장과 협력	-국가와 시장이 커먼즈를 지원하는 새로운 모델 구상 -다른 한편에서 국가-시장이 주도하는 탈커먼즈화를 묵인할 가능성
변혁적	자율주의 커먼즈론	국가-시장 내파의 씨앗	-공동체의 자율성, 주체성에 주목하는 담론으로서 유효 -자본의 축적으로부터 빠져나온 커먼즈 구상 -전환의 스케일 문제를 간과하는 한계

III. 대기 커먼즈

앞서 커먼즈 이론의 갈래들을 살펴보고 전환 담론으로서 갖는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았다. 전환 담론으로서 커먼즈는 현실 세계와 어떻게 접맥하고 있을까?

최근 국내에서 미세먼지를 중심으로 대기오염이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었다. 깨끗한 대기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고 삶을 재생산하는 필수재이다. 깨끗한 대기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면 삶의 질이 극심하게 저하되거나 삶이 지속불가능 해진다. 대기를 누구나 공동으로 향유해야 하는 ‘대기 커먼즈(atmosphere as commons)’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한 지점이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커먼즈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관점은 단일하지 않다. 커먼즈 이론의 스펙트럼이 넓듯이 ‘대기 커먼즈’는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대기 커먼즈가 어떻게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으며 각각이 가지는 함의는 무엇인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또 ‘대기 커먼즈’는 특정 지역 공동체와 일치하지 않는 커먼즈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와 같은 커먼즈의 구성에는 어떤 커먼즈화 전략이 가능한가 등의 중요한 쟁점을 제기한다. 대기 커먼즈의 쟁점에 대한 정리와 충분한 고찰이 요구된다.

이 장에서는 대기와 대기오염을 이해하고 대기를 관리하는 기존의 틀이 어떤 한계와 가능성을 내포하는지, 대기 커먼즈의 쟁점은 무엇인지 등을 고찰하여 본다.

1. 대기 커먼즈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가. 대기를 이해하는 주요 틀

커먼즈 이론의 갈래만큼이나 대기를 이해하는 방식도 다양하다. 대기오염과 같은 사안에 있어 제시되는 대기 관리 방안들을 살펴보면, 대기가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유추해 볼 수 있다. 주요한 대기 관리 방식으로는 시장화, 정부 규제, 거버넌스 구축 등이 있는데, 대기는 무주(無主) 자원, 공공신탁(public trust)자원, 공동관리자원 등으로 상이하게 이해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기는 시장화를 통해 관리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거래제가 2008년부터 수도권 사업장에 적용되다가 2020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 된다. 대기 이용에 대한 값을 지불하게 하여 과도이용과 무임승차를 막고자 하는 시장화 방안은 대기를 우주 공간 처럼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자원, 즉 무주자원으로 보는(Ronfeldt & Arquilla, 2018) ‘커먼즈 비극론’에 입각한다고 할 수 있다. 시장을 통하지 않고 다수가 이용하는 자원은 과도이용과 무임승차로 인해 비극에 이르기 쉬우므로, 대기 이용에 가격을 매겨 시장에서 거래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기는 정부 규제를 통해서도 관리될 수 있다. 대기 이용을 정부가 규제 방안에는 ‘커먼즈 비극론’ 또는 공화주의적 접근이 차용될 수 있다. 전자는 대기가 누구의 것도 아니므로 무임승차를 문제시하면서 강한 국가를 요구하는 관점이라면, 후자는 대기가 공동체의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공동체에게 신탁 받아 대기를 관리해야 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즉 커먼즈 비극론은 무주자원으로서, 공화주의적 접근은 공공신탁자원으로 대기를 바라본다. 무주자원에 대하여 ‘강한 국가’는 개인의 대기 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력체이고 개인은 국가에 의해 통제된다. 국가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대기를 관리하는 방식이다. 반면, 공공신탁자원에 대하여 ‘책임 있는 국가’는 신탁 관리자로서 공동체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공동체의 성원들은 자원에 대한 접근에서 배제되거나, 이익이 불균등하게 할당되었을 때 자원에 대한 동등한 접근과 향유의 권리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다(Torres, 2001; 박태현·이병천, 2016).¹⁷⁾ 공동체가 구성하는 ‘사회적 기준’에 의해 국가의 권한이 제한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기는 공동관리자원으로서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관리될 수도 있다.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지역 간/내 협의체를 구성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하려는 노력들이 대표적이다. 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대기 관리 방식은 ‘커먼즈 드라마론’과 ‘사민주의 커먼즈론’에 맞닿아 있다. 맥케이와 에치슨, 오스트롬 등으로 이어지는 ‘커먼즈 드라마론’의 핵심은 공동풀(common-pool)의 내부 관리 제도에 따라 커먼즈가 비극에 치달지 않고 지속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Ostrom, 1990). 이와 같은 논지는 대기와 같은 자원을 이용하는 공동체가 공동풀로 묶이지 않을 만큼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례 연구에 근거한 제도 설계 원리들이 설명력을 잃는다는 비판에 직면하지만(Araral, 2014) 큰 규모의 자원 관리를 설명하려는 ‘커먼즈 드라마론’은 개인 행위자가 아니라 기구, 기관, 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동풀을 전제하고 있다. 즉 대기에 대하여 개인 행위자 대신 정부, 기업, 단체, 국제정부기구(IGOs) 등이 어떻게 상호감시 및 제재하는 제도를 만들고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지를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다(McGinnis & Ostrom, 1996).

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대기 관리는 ‘사민주의 커먼즈론’과도 맞닿아 있다. 커먼즈에 대한 사민주의적 접근은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간 협력을 통해 사회적, 생태적 외부효과를 내부화하고자 한다. 특히 바우웬스와 코스타키스는 기업의 이해관계에 종속되지 않는 개혁 국가 모델로서 ‘파트너 국가’, 커먼즈가 중심이 되며 커먼즈를 지향하는 사회적, 호혜적, 연대적 경제로서 ‘윤리적 경제’, 그리고 시민사회 사이 협력을구상한다((Bauwens & Kostakis, 2014). 대기 관리는 바우웬스와 코스타키스가 집중하고 있는 사례가 아니지만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적용하면,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삼두 체제 속에서 대기 관리를 위한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17) 공공신탁자원에 대한 국가의 소유 방식은 ‘국유’가 아니라 ‘신탁적 소유’로 본다(Torres, 2001).

표 4. 주요 대기 관리 방식

대기 관리 방식	시장화	정부 규제		협력 거버넌스	
대기에 대한 이해	무주자원		공공신탁자원		공동관리자원
접근법	커먼즈 비극론		공화주의 접근		커먼즈 드라마론 사민주의 접근
문제	무임승차		국가의 신탁 의무 미이행		부적절한 거버넌스

종합하면, 대기는 시장화, 정부 규제,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관리될 수 있다. 시장화나 정부 규제 방안은 대기를 무주자원으로 이해하면서 ‘커먼즈 비극론’을 차용할 수 있으며, 대기에 대한 무임승차를 문제 삼는다. 정부 규제 방안은 대기를 공공신탁자원으로 이해하면서 공화주의 접근을 취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문제는 국가가 신탁 관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구축 방안은 대기를 공동물에 속하는 공동관리자원으로 보면서 ‘커먼즈 드라마론’을 확장·적용 시키거나 사민주의 접근을 취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정부, 기업, 공동체 간, 지역/국가 간 협력 거버넌스의 부재 혹은 부적절한 거버넌스이다.

나. 대기를 이해하는 주요 틀의 한계

대기를 무주자원, 공공신탁자원, 공동관리자원으로 이해하는 틀은 대기 문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진단과 해결책을 내놓으면서 대기를 관리하는 데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있다. 무주자원론에서는 무임승차가, 공공신탁자원론에서는 국가의 불충분한 신탁 의무 이행이, 공동관리자원론에서는 부적절한 거버넌스가 대기오염 문제를 설명해 준다.

각각의 틀은 대기오염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대기를 관리하는 데 차용되는 틀이 대기 문제에 대응하는 시민이나 공동체를 어떻게 상정하고 있는지, 대기라는 일부 영역으로 국한되기 힘든 공동체의 삶에 대하여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면서 해당 틀이 전환 과정에 시사하는 바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먼저, 무주자원론과 공공신탁자원론, 공동관리자원론은 각각 어떤 시민과 공동체를 상정하고 있는가? 시장 접근법을 옹호하는 무주자원론은 적절한 시장 제도만 설정된다면 외부 효과를 감소시켜 효율적인 거래로 대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신고전파 경제학의 논리를 따르고 있다.¹⁸⁾ 여기서 시민은 정교하게 설계된 시장 제도 하에서 비용-합리적 선택을 하는 개별자로 가정된

18) 신고전파 경제학에서는 시장을 경유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외부 효과’라고 한다. 시장 접근법을 옹호하는 무주자원론에서 대기오염은 외부 효과에 해당한다.

다. 개별화된 인간과 인간, 분리된 인간과 (자연)자원은 시장을 통해 서로 연결되는 것이다. 무주자원론은 문제의 해결을 시장 제도에 기대고 있기 때문에 시민을 시장 제도의 종속변수처럼 취급하거나, 시장을 통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과 삶의 조건을 바꾸어내는 시민의 집단적 역량을 간과하게 된다. 무주자원론이 국가의 강제를 도입하는 근거로도 활용되는 경우에도 국가 제도의 강제력에 기대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므로 시민의 능동성과 주체성, 공동체 수준에서 집단적으로 형성되는 규범이나 의무, 자발적 협력 가능성은 생략된다(정영신, 2016). 요컨대 무주자원론이 상정하는 시민은 시장이나 국가 제도를 매개로만 자원과 연결될 수 있고, 설계된 제도에 따라 움직이는 개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국가의 신탁적 관리를 옹호하는 공공신탁자원론에서 시민은 독립적 의사결정자나 규제 받는 개별자로 호명되지 않는다. 대기가 공동체에 속한 자원이라는 전제 하에 국가는 공동체로부터 신탁 받아 대기를 관리하는 것이므로 시민은 민주적, 집단적 역량을 가진 공동체로서 표상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국민국가 및 행정구역을 중요한 공동체 경계로 삼기에 쉽게 영역적 함정(territorial trap)에 빠진다. 애그뉴(John Agnew)는 근대 사회과학이 세계를 경계 지워진 배타적인 영토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함으로써 '영역적 함정'에 빠져있다고 비판했다(박배균, 2012 재인용). 영역주의에 함몰된 사회과학은 실제로 영토들이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끊임없는 갈등과 논쟁 속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공공신탁자원론의 신탁 공동체가 영역적 공동체로 한정될 경우, 대기 문제는 영역적 공동체의 독자적인 메커니즘, 여타 공동체와는 절연된 독립적인 과정으로 설명되기에 바로 그 공동체가 여러 다른 공동체들과의 연결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사실이 간과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국민국가와 행정구역의 틀에 고정되어 있고 미리 주어져 있으므로 보다 다양한 경계의 공동체나 경계가 중첩된 공동체들의 신탁 자원에 대한 논의는 누락되기 쉽다. 여러 정치적 관할권에 걸쳐 있는 자원은 공공신탁자원론으로 다루기가 까다롭다. 대기와 같은 초지역적 커먼즈에 대한 공공신탁자원론적 접근은 새로운 정치 공동체, 새로운 공공의 영역이 구성되지 않을 경우 배타주의적, 영역주의적 논의로 함몰될 가능성이 있다.

공동관리자원론은 자원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분쟁과 갈등이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보면서 국가와 시장만이 아니라 시민을 자치적·협력적 거버넌스의 주체로 등장시킨다. 그러나 시민이 어떤 의미에서 거버넌스의 주체인지는 거버넌스의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대기 자원의 주요 이해관계자로서 정부와 기업, 시민 단체 등이 거버넌스를 형성할 경우 각각은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게 될 것인가? 또 각각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누구의 입장을 얼마나 대변하게 될 것인가? 바우웬스와 코스타키스의 말처럼, 커먼즈를 만드는 시민사회의 자율적 생산의 증가, 커먼즈 지향적인 정부와 기업의 출현은 커먼즈에 대한 시민의 자치적, 주체적 역량이 증대된 형태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하다. 볼리어의 말처럼, 시장과 국가가 이제 와서 정신을 차리고 문제를 악화시키는 기업 활동에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Bollier, 2014). 예컨대 정부와 지방정부, 공공 기관, 오

염물질 배출 (다국적)기업, 시민 단체의 대기 관리 거버넌스는 대기를 공동의 것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기능할지, 많은 사람들의 삶을 두고 협상하는 방식이 될지, 공공신탁자원론보다도 영역적이고 배타적인 방식으로 기능할지 단정하기 힘들다. 또, 정부 혹은 ‘파트너 국가’가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 공동체만의 사회적 기준을 반영하여 대기 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한다면, 공공신탁자원론처럼 행정구역 공동체에 존재하는 이질성과 관계성을 간과한 채 영역적 함정에 빠지기 쉽다. 협력적인 대기 관리 거버넌스를 모색하려는 공동관리자원론은 시민을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거버넌스 주체로 부각시킬 가능성을 가지면서도, 시민을 ‘시민 참여’라는 미명 아래 거버넌스에 형식적으로 동원하거나, 영역주의에 빠진 거버넌스 행위자로 만들 위험도 함께 가진다.

나아가 세 가지 틀은 공통적으로 대기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제도가 무엇인가에 관심을 두면서 상정하는 공동체의 대기-삶을 균질하게 취급하는 한계를 가진다. 대기 관리 제도를 통한 대기-삶의 균등한 향상을 가정하기 때문에 대기-삶들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보여주지도, 바로 그 관계가 대기질을 악화시킨 핵심적인 요인임을 드러내지도 못한다. 대기를 무주자원, 공동자원, 공공신탁자원, 어떤 방식으로 보든 이들의 시야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조직되는 대기-삶의 생성과 변이, 대기-삶 사이에 존재하는 불평등한 관계가 소거된다. 정영신(2016)은 공동자원 관리제도 설계에 방점이 찍힌 오스트롬의 이론이 공동체의 형성과 변동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이와 같은 지적은 오스트롬 이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대기오염에 직면하여 보다 정교한 시장 제도, 보다 책임감 있는 국가, 보다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설계하는데 집중된 노력은 대기-삶을 입체적으로 보는데 기여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에 대한 관심을 누락시키고 있다. 대기를 이해하는 세 가지 주요 틀은 관리주의, 제도주의적 접근을 취하면서 대기 중 오염물질 농도와 같이 대기 자체의 속성을 변화시키고자 하기에-대기오염이라는 사안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할지도 모르는-대기와 사람들의 삶이 맺는 관계가 이질적이고 끊임없이 변화하며 불평등할 수 있다는 점은 부차적으로 취급하거나 생략한다.

표 5. 대기에 대한 무주자원론, 공공신탁자원론, 공동관리자원론 비교

구분	무주자원	공공신탁자원	공동관리자원
문제	무임승차	공공의 신탁 의무 미이행	부적절한 거버넌스
해결책	정교한 시장제도, 강한 국가	책임있는 국가	협력 거버넌스
시민	독립적 의사결정자 또는 규제받는 개인	영역적 공동체 구성원	(주체적 또는 동원된) 거버넌스 행위자
관심	대기질 개선에 관심, 대기-삶의 균질한 향상 전체 대기-삶의 이질성, 불평등에 무관심		

2. 대기 커먼즈의 쟁점

대기를 무주자원, 공공신탁자원, 공동관리자원으로 이해하는 틀은 대기 커먼즈에 대한 상이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무주자원론의 경우 대기가 공동체에 속한 것이더라도 대기 자체의 속성상 이용 공동체의 범위가 매우 크고 누구든 접근을 배제할 수 없기에 주인 없는 자원과 흡사해 진다는 논리를 펴고, 시장화와 강한 국가를 제시할 것이다. 공공신탁자원론은 대기가 공동체에 속하긴 하지만 대기처럼 규모가 큰 자원은 공동체가 직접 관리하기 힘들므로 공동체에게 신탁 받은 공공이 관리해야 한다고 본다. 공동관리자원론은 대기가 공동체에 속하여 공동체의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관리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공동체는 정부, 기업, 단체 등으로 구성된다.

대기 커먼즈는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으며, 앞서 살펴보았듯이 각각이 가지는 한계도 분명하다. 어떻게 기존의 한계를 넘어서면서 대기 커먼즈를 이해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먼저 대기 커먼즈를 이해함에 있어 중요하게 부상하는 쟁점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특정 지역 공동체와 일치하지 않는 커먼즈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대기 커먼즈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할 때, 바로 그 공동체는 누구인가? 대기 커먼즈와 공동체의 불일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등에 대하여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다른 하나는 커먼즈에 대한 가치 판단의 문제이다. 커먼즈론의 다양한 갈래들은 커먼즈의 희극/비극, 성공/실패, 지속가능/지속불가능을 판단하는 서로 다른 기준과 시선을 보여주고 있다. 마찬가지로 대기 커먼즈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는 논쟁적이다. 여기서는 대기질 개선 자체가 대기 커먼즈의 질적 향상을 의미하는가? 대기 커먼즈는 부패할 수 있는가? 등을 검토해 본다.

가. 커먼즈와 공동체의 불일치

대기 커먼즈를 논의하는 데 있어 쟁점이 되는 것 중 하나는 대기 커먼즈가 로컬 커먼즈(local commons)와 상이한 특성을 가진다는 점이다. 지역이나 마을에 속한 커먼즈로서 마을숲, 공동목장, 공동어장 등은 이것을 집합적으로 소유하는 공동체가 상대적으로 뚜렷하다. 로컬 커먼즈와 달리 대기는 경계를 규명하기 모호하고 대기를 집합적으로 소유하는 공동체를 특정하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대기를 초지역적(trans-local) 또는 글로벌(global) 커먼즈라고 보기도 한다. 그렇다면 초지역적 커먼즈와 공동체의 관계는 어떻게 규명해야 하는가?

에너지 기반시설(infrastructure)을 커먼즈로 구상한 홍덕화(2018)의 연구는 기반시설을 지역 공동체와 등치시키지 않고 새롭게 사유하는 방식으로서 커먼즈 관점을 도입하고 있어 대기 커먼즈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에 따르면, 기반시설을 물리적 층위, 논리적 층위, 내용적 층위 등 다차원적인 것으로 구분할 경우 특정 영역에서 국가 스케일의 에너지 체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영역에서는 지역 공동체에 기초한 에너지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기반시설의 계획,

생산, 운영, 이용의 집단을 반드시 일치시키지 않고 에너지 커먼즈를 구성할 수 있다.

대기 커먼즈도 마찬가지로 여러 층위와 경계의 공동체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대기 자체의 물리적 속성에 초점을 둔 ‘호흡 공동체’, 오염물질을 배출하며 대기를 이용하는 공동체,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배출을 감축하며 대기를 관리하는 공동체 등은 행정구역을 경계로 존재할 수도, 대기-삶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존재할 수도 있다. 대기 커먼즈는 커먼즈와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는 복수의 공동체와 그 관계성을 인정하면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서울시의 주요 대기오염원은 자동차 배기가스와 같은 이동오염원이다(서울시, 2018). 서울시에는 전국적으로 가장 촘촘한 도로망을 구축되어 있으며 면적당 등록된 자동차 대수 또한 주요 도시들의 4배 이상이다.¹⁹⁾ 자동차 중심 교통 체계는 서울이라는 행정구역 공동체가 대기를 집합적으로 이용하는 방식 중 하나이다. 한편, 석탄화력발전소가 집중되어 있는 충청남도(특히 당진시)의 경우 에너지산업 연소가 주요 대기오염원이다(충청남도, 2018). 서울과 충남의 대기 이용 방식은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국내 산업·에너지 체계 속에서 상호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공기청정기기술을 통해 고유한 대기-삶의 방식을 형성하며 대기를 이용하는 공동체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공기청정기를 구입하거나 공기청정기기술이 적용된 자동차, 아파트, 카페, 쇼핑몰을 이용하는 공동체의 삶의 방식은 대기를 탈커먼즈화 시키는데, 이와 같은 공동체는 행정구역의 경계로 환원되지 않는 공동체이다.

대기를 관리하는 공동체도 대기 이용 공동체와 일치시키지 않고 관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을 일치시키고 독립적으로 이해하는 경우 영역주의에 빠지기 쉽다. 가령 서울시의 주요 대기 관리 정책 중 하나는 차량을 전기차나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인데²⁰⁾ 이는 서울시 내 오염물질 배출을 감축할 수 있지만 자동차 생산·소비 구조는 유지시키므로 자동차 생산 과정에 위치한 다른 도시나 지역의 오염물질 배출도 유지시킨다. 대기 관리 공동체로서 서울은 발전업이나 제조업 밀집 지역 공동체와의 연결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

대기 이용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대기 관리 공동체도 행정구역이란 경계로 환원되지 않는다. 자전거로 이동하는 삶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공동체, 다른 공동체의 대기-삶을 악화시키지 않는 삶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공동체 등도 넓은 의미에서 대기 관리 공동체로 볼 수 있다.

요컨대 대기를 커먼즈로 만드는 공동체는 단일하지 않고 여러 층위와 경계를 가지고 중첩되어 있다고 보는 것, 그리고 그 공동체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존재한

19) 주요 도시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으로 하였다. 국토교통부(2019)에 따르면, 국토면적당 도로연장(km/km²)은 전국 평균 1.1, 서울 13.67이고, 주요 도시들의 경우 부산 4.38, 대구 3.24, 인천 3.08, 광주 3.71, 대전 3.97, 울산 2.02 등이다. 국토면적당 자동차도로연장(천대/km²)은 전국 평균 0.23, 서울 5.17, 부산 1.78, 대구 1.33, 인천 1.48, 광주 1.33, 대전 1.24, 울산 0.53 등이다.

20) 서울시 대기 관리 정책은 노후 경유차 등 도로이동오염원 관리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황인창, 2018). 2017년에 발표한 「미세먼지 10대 대책」에서 노후 경유차 중심 도로이동오염원 대책이 예산의 약 60%를 차지했다.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변경계획 추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시행계획」의 4개 분야(자동차 관리, 배출시설 관리, 생활오염원 관리, 비산먼지 관리, 과학적 관리기반 구축 및 시민홍보)에서 가장 높은 예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도 자동차 관리 분야(75.4%)이다.

다고 보는 것이 필요하다. 대기 커먼즈와 공동체에 대한 다층적, 관계적 접근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첫째, 대기 커먼즈에는 균질하고 단일한 공동체가 대응되지 않는다. 대기를 커먼즈화하거나 탈커먼즈화하는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다.

둘째, 대기의 커먼즈화, 탈커먼즈화가 나타나는 규모와 형태는 다양하다. 서울과 당진의 관계를 통해, 혹은 공기청정기술이나 도시의 대기 관리 정책을 계기로 나타나는 대기의 커먼즈화, 탈커먼즈화를 포착할 수 있다. 대기 커먼즈에 동반되는 상이한 규모와 형태의 정치를 발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기는 공동체들의 대기-삶이 연결되는 방식을 통해 커먼즈화되거나 탈커먼즈화 될 수 있다. 대기-삶은 초지역적, 지구적인 생산 사슬과 무역 등을 통해 연결되며, 그러한 연결이 어떤 공동체의 대기-삶을 완전히 다른 형태로 구성할 수 있다. 대기-삶의 연결망은 대기 커먼즈의 외부 변수가 아니라 대기를 커먼즈화하거나 탈커먼즈화하는 핵심 기제 중 하나이다. 다양한 공동체의 대기-삶이 어떻게 연결되어 상호 구성되는지 살펴보는 것은 대기 커먼즈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이다.

나. 커먼즈의 부패

앞서 다룬 쟁점이 대기 커먼즈가 무엇인가, 대기 커먼즈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등 커먼즈에 대한 존재론적, 인식론적 논의였다면, 여기서 다룰 것은 대기 커먼즈를 어떤 기준으로 가치 판단 할 것인가 하는 가치론적 쟁점이다.

커먼즈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논쟁적이다. 커먼즈론의 다양한 갈래들은 커먼즈의 희극/비극, 성공/실패, 지속가능/지속불가능을 판단하는 서로 다른 기준과 시선을 보여주고 있다. 커먼즈의 지속가능성 자체에 가치를 부여할 수도 있고, 커먼즈와 커먼즈를 둘러싼 외부와의 관계에 따라 가치 평가를 달리할 수도 있다.

이 쟁점은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대기 커먼즈에 대한 가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물론 호흡 공동체의 공동의 이익을 고려할 때 대기질 개선 자체가 대기 커먼즈의 질적 향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높은 당진시가 상대적으로 농도가 낮은 서울시에 비해 낮은 수준의 대기 커먼즈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상당히 단편적인 판단일 수 있다. 1970년대부터 시행된 서울시의 ‘공해 공장 이전’ 정책(매일경제, 1976.01.23.; 동아일보, 1985.03.18.), 생산된 에너지와 물자의 주요 소비처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충남, 경남, 강원과 같은 지역에 화력발전소와 시멘트·제철·석유정제 등 대기오염물질 다배출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등(환경부, 2017; 서울신문, 2017.06.26.) 역사적으로 불균등하게 배치되어 온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고려가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대기오염도가 낮은 북미, 북유럽 국가들이 매우 높은 대기오염을 겪고 있는 네팔, 카

타르,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국가들에 비해 더 나은 수준의 대기 커먼즈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기 관리에 대한 법제도의 발달, 대기오염 저감 기술의 발달을 감안하더라도 1970년대부터 미국과 일본, 서유럽에서 인건비가 저렴하고 노조와 규제가 없거나 약한 지역으로 생산 기지를 이전한 역사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프레시안, 2010.01.07.).

대기 커먼즈를 대기 그 자체의 속성으로 판단하지 않지 않는다면 어떤 기준이 가능한가? 이에 대해서는 자율주의 커먼즈론을 참고하는 것이 유용하다. 그 외의 접근들은 대체로 커먼즈의 내부 역학에 집중하거나 커먼즈 자체의 지속가능성에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특정 영역(국가나 지역) 내 대기질 개선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대기 커먼즈에 대해 관계적으로 접근하면서 가치 판단 기준을 논의하는데 있어, 자율주의 커먼즈론의 ‘커먼즈의 부패’, ‘커먼즈의 왜곡’, ‘커먼즈의 흡수’ 등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커먼즈의 대안근대성에 대한 풍부한 이론적 자원을 제공하고 있는 네그리와 하트는 커먼즈라고 해서 모두 이로운 형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커먼즈의 부패에 대해 논의한다(Hart & Negri, 2009: 235-241). 그에 따르면, 커먼즈에 위계와 통제, 배제가 작동하여 ‘함께 사유하고 행동하는 공동의 힘이 감소’할 때, ‘사회적 상호작용의 네트워크들이 봉쇄되고 사회적 생산의 힘이 감소’할 때 커먼즈는 부패한다. 예를 들어, 가족, 기업, 민족 등이 모두 커먼즈를 토대로 함에도 불구하고 부패한 사랑에 근거하여 위계와 통제, 배제를 부과함으로써 커먼즈를 왜곡하고 제한한다. 개인을 넘어 공동체로 욕망과 관심을 확대하는 척 하지만 극단적인 형태의 나르시시즘과 개인주의를 투사하여 사회적 협력 관계에 젠더 규범, 단일한 정체성 등을 기준으로 강한 한계를 지운다는 것이다.

데 안젤리스도 커먼즈의 왜곡과 손상에 대해 언급한다(De Angelis, 2009; 2017: 136, 195). 관료주의, 관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커먼즈, 다른 커먼즈와의 경쟁적인 전쟁에 종사하는 커먼즈(예를 들어, 신자율주의 가족(neoliberal families)이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나 커먼즈는 자본주의적 생산에 이용, 흡수될 경우 왜곡된 형태를 띤다. 가령, 공장은 커먼즈를 상품의 생산을 위해 기능하도록 만들기 위해 그 외에 삶의 재생산에서 중요한 측면들은 자본 축적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아래 종속된다. 상품 생산 커먼즈의 예는 오스트롬의 커먼즈론에서도 찾을 수 있다. 나아가 커먼즈의 보존과 발전의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목적이 ‘투자’와 자본 축적에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내에 자율주의 커먼즈론을 소개하고 사례를 통해 구체화시킨 권범철(2019)도 커먼즈의 흡수에 대해 고찰한다. 그는 공동체 삶 그 자체가 목적인 ‘전술 커먼즈’와, 공동체의 활력과 부를 도구화하는 ‘전략 커먼즈’를 구분한다. 경쟁과 축적과 같은 자본의 가치를 실천하는 ‘전략 커먼즈’는 무언가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공동체의 삶을 관리, 조정, 흡수함으로써 자본의 대안이 아니라 출구 전략으로 커먼즈를 전유하고자 한다. 2000년대 국내외에 형성된 ‘창조도시’는 예술가들의 자율적인 실천을 ‘도시 경쟁력 향상’이라는 가치 회로 속으로 조정, 관리, 흡수하고자 한 ‘전략 커먼즈’의 일종이다.

이상의 논의들에 따르면, 커먼즈의 부패(또는 왜곡, 흡수 등)는 커먼즈에서 작동하는 배제를

통해 발견될 수 있다. 대기 커먼즈의 부패는 대기-삶들의 공생적 연결이 아니라 기생적·착취적 연결에 복무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위험을 다른 대기-삶으로 이전, 재배치하는 경우이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1970년대 시행된 서울시의 공해 공장 규제는 공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 그 위험을 고스란히 다른 공동체의 몫으로 넘겼다. 또 서울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차량 저공해화, 전기차 보급 및 이용은 자동차 산업 체계 속에서 재생산되는 공동체들의 대기-삶에 무관심하다. 대기오염의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일명 '노더스트(no-dust)족'은 공기청정기를 구매하고 공기청정기술에 적용된 자동차, 아파트, 실내 놀이터, 헬스장, 키즈카페, 멀티플렉스, 복합쇼핑몰 등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새로운 대기-삶을 형성하는데²¹⁾ 이는 상품에 대한 구매력이 없거나 구매할 의사가 없거나 구매할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는 공동체의 대기-삶을 배제시키는 방식이다.



공해업소의 이전(매일경제, 1976.01.23.)



지방공단 주변 공해 심각하다(동아일보, 1985.03.18.)



수소경제 눈뜬 서울시...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기폭제 된다(메니투데이, 2018.10.24.)



영풍 석포제련소 오염, 'PD수첩' 통해 밝혀져(시사주간, 2019.06.12.)

〈그림 5〉 대기-삶의 기생적·착취적 연결

21) '노더스트족'은 공기청정기, 의류살균기(스타일러) 등을 구매하고 산소방 등 맑은 공기를 접할 수 있는 곳이나 키즈카페, 아쿠아리움 등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택해 대기오염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노력한다(비에스투데이, 2018.05.29.). 멀티플렉스, 복합쇼핑몰, 영화관 등의 매출액은 미세먼지 경보가 '나쁨' 이상을 기록할 경우 '보통'일 때보다 큰 폭 증가했다(아주경제, 2019.03.07.).



공기청정기 광고(<https://www.tvcf.co.kr/>)



키즈카페 어린왕자 “미세먼지 걱정 없어요”(매일경제, 2014.01.20.)

〈그림 6〉 공기청정기술이 적용된 대기-삶

부패한 대기 커먼즈는 강한 배타성을 띤다. 대기오염의 위험이 영역적 공동체로부터 빠져나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공동체, 힘 관계에서 열세에 있는 공동체로 이동하는 데에 둔감할 뿐만 아니라 이를 방조한다. 부패한 대기 커먼즈를 토대로 한 대기 관리 방식은 위험을 몰아낼 뿐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한다.

IV. 녹지 커먼즈

녹지는 토지의 여러 이용 형태 중 하나이다. 녹지에는 비교적 큰 규모의 산과 숲, 습지와 하천부터 텃밭이나 크고 작은 공원 등이 포함된다(Bolund & Hunhammar 1999; 고하정, 2019). 녹지에 대한 접근 제한은 사람들의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오므로 기본적인 필요에 부합하는 충분한 녹지 확보가 필요하다. 여기서 녹지에 대한 접근을 직접적인 이용의 의미로 국한하지 않는다면, 녹지에 대한 접근 문제는 삶의 지속가능성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녹지가 갖는 사회생태적 가치, 이를테면 이산화탄소 흡수, 생물다양성 보존, 녹지를 매개로 한 사회적 관계 유지·발전 등을 고려하면, 충분한 녹지의 확보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녹지의 사회생태적 가치를 직간접적으로 향유하면서 공동의 삶을 지속가능하게 만들어나가는 문제로 볼 수 있다. 녹지를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가치와 이익을 향유해야 하는 ‘녹지 커먼즈’(greenspace as commons)로 바라보는 것이다.

녹지는 특히 도시 발전의 흐름 속에서 축소되거나 소멸되는 경향이 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현안으로 대두된 도시공원 ‘일몰제’와 그에 대한 대응은 생산을 위한 토지(농지 등)와는 다른, 도시발전의 고유한 정치경제적 동학 속에서 어떻게 녹지가 형성되거나 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도시공원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10년 이상 지자체가 계획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부지는 자동으로 공원에서 해제되는 제도이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헌법이 정한 개인의 권리, 곧 소유권을 침해한다는 1999년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0년 7월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전국의 지자체들은 공원 부지를 매입·임차하거나, 민간공원·민영공원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하화된 도로·철도의 지상 부지를 공원화하여 녹지를 확보하거나, 해당 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이나 보전녹지로 재지정하여 개발을 제한하거나, 개발권 이양하여 해당 부지를 보존하는 등 다양한 녹지 확보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녹지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을 바탕으로 녹지를 이해하는 주요 틀이 어떤 한계를 가지는지 살펴보고, 녹지 커먼즈의 쟁점을 고찰한다.

1. 녹지 커먼즈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가. 녹지를 이해하는 주요 틀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녹지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존재한다. 녹지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을 살펴보면, 녹지가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유추할 수 있다.

먼저, 녹지는 정부 규제를 통해서 혹은 정부가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확보될 수 있다. 예컨대

녹지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특정 부지를 정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이나 보전녹지로 지정하여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고, 정부가 토지를 매입하여 국유화한 후 녹지에 대한 운영·관리는 정부가 직접 하거나 공동체에 위탁할 수도 있다. 이 방안은 기본적으로 녹지 확보에서 정부의 책임이나 의무를 내세우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서 녹지는 공공신택자원으로 간주된다. 공공이 녹지 확보의 의무와 책임을 공동체로부터 신택받았다고 보는 공화주의적 접근이다.

녹지는 민관 협력을 통해서도 확보할 수 있다. 민간공원 및 민영공원 사업이 대표적이다. 민간공원은 녹지의 30%, 민영공원은 녹지의 40%에 대한 개발권·수익권을 민간 자본이 가지고 나머지 토지를 공원화 하는 민관 협약이다. 또 도로나 철도를 지하화한 후 지상 부지를 공원화하면서 녹지를 확보하는 방안도 있는데, 터널 착공 혹은 역세권 개발 등에 대한 민관 협약을 통해 그 재원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²²⁾ 이처럼 민관 협력을 통해 녹지를 확보하는 방안은 사민주의 접근을 차용한다고 볼 수 있다. 국가는 ‘파트너 국가’로서 공동이 이용하는 녹지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 자본과의 조율을 거친다. 또 민간 자본은 부정적인 사회생태적 외부 효과를 줄이고 녹지를 공동의 것으로서 확보하면서도 시장의 자유를 유지한다. 시민사회는 확보된 녹지를 공동의 것으로서 향유할 수 있다. 녹지는 ‘윤리적 경제’의 시장 자유와 ‘파트너 국가’의 책임 사이 최적 지점에서 확보되는 자원이다.

녹지는 공동체 자산(community asset)화를 통해서도 확보할 수 있다. 공동체 소유권(community ownership)을 형성하는 예로는 동유(洞有)처럼 마을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는 방식, 토지협동조합처럼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녹지로 활용하는 방식, 공동체토지신택(Community Land Trust, CLT)처럼 비영리 조직이 토지를 신택적으로 소유하는 방식 등이 있다. ‘내셔널트러스트(National Trust)’처럼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증이나 기부를 바탕으로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녹지를 확보하는 비영리 조직도 있다.²³⁾ 공동체 자산화는 공동체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나(조성찬, 2016)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자원을 자치적, 자율적으로 이용·관리하고자 하기에 공동체 소유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공동체 자산화에 대해서는 자유주의 접근과 자율주의 접근이 가능하다.

22) 서울 경의선을 지하화하고 지상 부지를 ‘경의선 숲길 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에는 홍대입구역, 공덕역 등 역세권 개발에 대한 민관 협약이 포함되었다. 또 서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계획의 경우 민자 터널 착공 계획이 포함되었다(경향신문, 2016.12.15.).

23)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시민 자산화를 통해 확보한 녹지로는 인천시 ‘강화 매화마름군락지’, 강원도 정선군 ‘동강 제장마을’, 경기도 ‘연천 DMZ일원임야’, 충북 청주시 ‘원흥이방죽 두꺼비 서식지’, 경북 예천군 ‘내성천 범람원’, 경기도 성남시 ‘맹산 반딧불이 자연학교’, 전남 ‘함평 균유산임야’ 등이 있다.

표 6. 주요 녹지 확보 방식

녹지 확보 방식	정부 규제	국유화	민관 협력	공동체 자산화	
녹지에 대한 이해	공공신탁자원		최적관리자원	공동관리자원	
접근법	공화주의 접근		사민주의 접근	자유주의	자율주의

종합하면, 녹지는 정부의 규제·매입, 민관 협력, 공동체 자산화를 통해 확보될 수 있다. 정부의 규제나 매입 방안은 녹지를 공공신탁자원으로 이해하면서 공화주의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민관 협력 방안은 자본과 국가의 협상을 통해 녹지를 확보하는 사민주의 접근으로 볼 수 있다. 이때 녹지는 ‘윤리적 경제’의 시장 자유와 ‘파트너 국가’가 지는 책임 사이의 최적 지점에서 확보된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자산화 방안은 녹지를 공동체가 자율적·자치적으로 관리하는 자원으로 보면서 자유주의 접근을 취하거나 자율주의 접근을 취할 수 있다.

나. 녹지를 이해하는 주요 틀의 한계

앞서 살펴본 녹지 확보 방안들은 2020년 7월 실효되는 공원 ‘일몰제’에 대응하는 대부분의 방식이기도 하다. 전국의 지자체는 363km² 중 158km²를 공원으로 재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2023년까지 지방예산 및 지방채 총 7.3조원을 투입하여 공원을 매입할 계획을 수립하고, 70개소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국토교통부, 2019). 부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방식, 민간공원·민영공원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 외에도 각 지자체들은 지하화된 도로·철도의 지상 부지를 공원화하여 녹지를 확보하거나, 해당 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이나 보전 녹지로 재지정하여 개발을 제한하거나, 개발권 이양하여 해당 부지를 보존하는 등 다양한 녹지 확보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공원 ‘일몰제’와 관련하여 공동체 자산화 운동도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녹지 확보 방안들이 전제하고 있는 ‘절대적 소유권’의 한계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절대적 소유권은 상대적 소유권에 대비되는 개념이다(윤여일, 2018). 토지에 대한 절대적 소유권은 토지 소유권자의 용익권(이용과 수익에 대한 권리)과 처분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반면, 상대적 소유권에서는 소유권과 여타 권리들이 (일부) 분리된다.

절대적 토지 소유권의 틀 안에서 사유된 토지는 소유자가 이를 양도하지 않는 한 영원히 지속되는 ‘전제(專制) 영역’이며, 소유주가 다른 소유주에게 이익이 되는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토지는 교환가치로서의 자본으로 변형된다(Capra & Mattei, 2015).

가령, 절대적 소유권을 전제한다고 볼 수 있는 현행법상 ‘공유’는 2인 이상이 물건을 ‘지분’에

의하여 소유하는 관계를 말하는데(민법 제262조 제1항), 성질상 단독 소유자인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에 따라 사용하고 수익을 낼 수 있으며(민법 제263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68조). 별도의 권리능력을 가진 단일체로서 법인의 단독 소유도 마찬가지로, 토지에 대한 이용과 수익, 처분 권한이 모두 포함된 형태이다.²⁴⁾

한편, 상대적 토지 소유권 하에서는 녹지의 소유권과 여타 권리들을 분리된다. 녹지가 누구의 소유인가와 관계없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사용가치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합유나 공유에서는 녹지를 이용하고 수익을 취하고 처분하는 등의 권리들이 소유권에 의해 보증되기 보다는, 소유권과 (일부)분리되고 떨어져 나와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합유는 2인 이상이 '지분'이 아니라 상호출자한 '조합체'로서 무언가를 소유하는 관계인데(민법 제271조), 각자는 지분을 갖고 있지만 조합체라는 특별한 관계로 묶여 있기에 전원의 동의 없이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민법 제273조). 합유 관계는 조합체가 해산하거나 합유물을 양도할 때 비로소 종료된다(민법 제274조). 공유는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은 사단(社團)이 '집합체'로서 무언가를 소유하는 관계이다(민법 제275조 제1항). 다수가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결합되어 있지만 여기에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은 단체를 비법인 사단이라고 하는데, 법인격이 없기에 소유권이 귀속될 권리 주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집합적 관계로서 소유하게 되는 경우를 공유라고 한다. 공유에서는 각자의 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합유와 구분되며(박태현과 이병천, 2017) 단체의 회원 지위를 취득 또는 상실함에 따라 공유물 이용에 관한 자격도 취득 또는 상실된다(민법 제276조 제1항). 공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고,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공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민법 제276조). 공유는 지분권이라는 개념을 취하지 않고 분할 청구권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특징인데, 분가(分家)의 농지를 사적으로 매각할 때 부락 영역에 속한 토지를 타 부락에 넘기지 않도록 분가(本家)와 우선 상의하고, 분가가 사들일 여력이 없다면 부락의 장과 상의하는 절차를 취한 일본의 공유제 사례가 존재한다(윤여일, 2018). 개별적 토지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하되 정기 차지권으로 지역 전체의 비전 아래 토지를 공동이용하고, 거기서 얻어진 이익을 공유 단체의 구성원에게 배당함으로써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한 사례도 있다(五十嵐敬喜, 2014: 182).

24) 한국민법전에서 택하고 있는 공동소유 유형은 ①2인 이상(다수성)의 단독소유(개인주의) 형태인 '공유', ②2인 이상(다수성)이 조합체(단체주의)로 결합한 '합유', ③단일체(단일성)로 별도의 권리능력을 가지고 단독소유(개인주의)하는 형태인 '법인의 단독소유', ④개별 성원과 구분되는 단체로서의 외형(단일성)을 갖고 있지만 별도의 권리능력을 갖지 못한 집합체로 결합된 '공유' 등이다(박태현과 이병천, 2017).

표 7. 절대적 소유권과 상대적 소유권

절대적 토지소유권	상대적 토지소유권
-소유권에 용익·처분권이 포함 -교환가치의 극대화 가능 -예: 현행법상 공유, 법인의 단독소유 등	-소유권과 용익·처분권의 분리 -사용가치 확대에 초점 -예: 합유, 총유 등

그런데 녹지를 확보하는 주요 방안들은 대체로 토지에 대한 절대적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어, 토지를 교환가치를 가지는 자원으로 보면서 토지 자본의 축적 기제에 침묵하는 한계를 가진다. 정부나 공동체가 부지를 매입하는 방식은 결과적으로 녹지를 확보하는 주요한 방안임이 분명하나 그 과정에서 소유주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금전적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녹지의 일부에 대한 개발권을 민간 자본에 내어주고 나머지 토지를 보존하는 방식 또한 소유주의 절대적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시정부가 주어진 비율에 따른 분할과 처분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방식이다. 도로나 철도를 지하화 후 지상 부지를 공원녹지화 하는 방안은 지상 부지의 용익권을 지하 개발권과 맞바꾸는 방식으로서 절대적 소유권의 수직화에 해당한다.

절대적 소유권에 입각하여 녹지를 확보하는 방안들은 토지를 교환가치를 가진 자본으로 변형시키고, 토지가 자본의 증식 도구로 활용되는 것을 용인하기 때문에 특정 부지를 녹지로 확보하더라도 그 외 영역에서 토지를 통한 축적, 투기로 인한 지가 상승을 문제 삼기 어렵다. 이와 같은 기제가 유지·재생산될 경우 새로운 녹지 확보는 점차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

표 8. 주요 녹지 확보 방식

녹지 확보 방식	정부 규제	국유화	민관 협력	공동체 자산화	
녹지에 대한 이해	공공신탁자원		협력관리자원	공동관리자원	
접근법	공화주의 접근		사민주의 접근	자유주의	자율주의
토지관	-	절대적 소유권			-

2. 녹지 커먼즈의 쟁점

가. 커먼즈에 대한 권리

공동의 것으로서 녹지, 즉 녹지 커먼즈의 형태는 공동체가 소유하고 공동체가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녹지에서부터 국공유지나 사유지를 공동체가 사용하는 녹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수 있다(홍덕화, 2018). 녹지에 설정되어 있는 소유권과 접근권, 수익권, 사용권, 처분권 등도 상이할 수 있다. 그에 따라 녹지는 과시적이거나 상징적인 전시물이 될 수도 있고, 모두에게 개방된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누구도 사용하지 않는 방치된 공간이 될 수도 있다. 녹지 커먼즈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녹지에 부여된 권리의 묶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五十嵐敬喜, 2014; 홍덕화, 2018).

우선 논자마다 커먼즈에 대한 권리를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병천(2018)은 오스트롬 그룹의 커먼즈론은 공동자원을 이미 주어져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효율적 관리 방안이 집중하면서 사회 성원의 보편적 권리로서 커먼즈를 어떻게 창조할 것인가의 문제를 시야 밖에 두었다고 지적한다. 그에 비해 맥퍼슨(Macpherson)은 사유와 국유 재산의 배제적 속성에 대항하는 의미에서 공동재산을 ‘배제되지 않을 보편적 권리’로서 바라본다(이병천, 2018 재인용). 맥퍼슨은 커먼즈 논자로 잘 분류되지 않지만, 커먼즈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에 이미 공과 사 이원론을 넘어서는 공동재산 개념을 제시한 정치경제학자로서 의미가 있다. 그는 왜 재산권이 타인의 사용과 혜택을 배제하는 배타적 권리(exclusive rights)여야만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배제되지 않을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반으로 공동재산 개념을 제안했다. “공동재산은 각 개인들이 어떤 사물의 사용이나 편익으로부터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에 의해 창조된다”(Macpherson, 1973; 이병천, 2018 재인용)는 맥퍼슨의 주장은 커먼즈에 대한 보편적 접근과 사용의 권리에 주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커먼즈에 대한 권리를 ‘배제되지 않을 보편적 권리’로만 보는 것은 단편적일 수 있고, 맥퍼슨처럼 국유 재산이 늘 배제적 속성을 가진다고 보는 것은 국유 재산이 사회적으로 기능할 가능성, 국유 재산의 커먼즈화 가능성을 차단하므로 한계가 있다.

마테이 등이 전개하고 있는 커먼즈론의 경우, 국가를 거부하기 보다는 국유 재산을 포함한 공동의 재산이 ‘사회적 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이때 ‘사회적 기능’이란 인간의 기본권 실현과 자유로운 발전을 의미한다. 마테이 등의 커먼즈론에서 커먼즈에 대한 권리는 새로운 삶의 양식 및 재산의 양식을 추구할 권리로 확장되는 것이다(이병천, 2018). 같은 맥락에서 마테이는 커먼즈에 기반하여 소유권의 내용도 조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그는 카프라와의 공동 저작에서,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자원을 커먼즈로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커먼즈는 공동체가 번성하는 데 필요한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는데, 만약 소유권이 근대적 재산-주권 장치로 인해 사회적·공익적 기능을 저해할 경우 소유권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Capra &

Mattei, 2015). 현재 작동하는 소유권이 생태계와 공동체의 삶을 착취함으로써 부를 축출하는 착취적 소유권(extractive ownership)이라면, 공동체가 생태적으로 번영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생성적으로(generative ownership)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Kelly, 2012; Capra & Mattei, 2015 재인용). 이와 같은 논의에서 커먼즈는 기존의 소유권 위에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의 의미 자체를 전환하는 장치로 해석된다. 커먼즈가 표현하고 있는 권리는 지배적인 소유권의 규칙에 따라 공동체가 커먼즈를 집합적으로 소유할 권리라기 보다는 바로 그 소유권의 내용 자체를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전환시켜 공동의 부를 창출할 권리인 것이다.

도시의 커먼즈화를 논의할 때 자주 인용되는 르페브르(Lefebvre)와 하비(Harvey)의 ‘도시에 대한 권리’ 논의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은 도시를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생산한 작품으로 보면서 도시 거주자들이 도시 공간을 생산하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공간에 접근하고 사용하며, 필요에 따라 새로운 공간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Harvey, 2012). 르페브르는 도시의 거주자들이 도시 공간을 생산하는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참여의 권리’를, 공동체의 필요나 잠재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공간을 바꾸거나 새로운 공간을 창출할 권리로서 ‘전유(appropriation)의 권리’를 이야기했다(강현수, 2010 재인용). 하비는 르페브르의 도시권 개념을 이어받으면서 도시가 형성될 때 생산되는 잉여에 대한 권리까지 주장한다(Harvey, 2012: 56). 그는 도시를 통해 생산되고 이용되는 잉여, 곧 공동의 부가 민주적으로 분배되고 사회적으로 관리되기보다는 자본의 축적에 사용되면서 도시가 정치경제 엘리트의 수중에 들어가 있다고 비판한다. 하비에 따르면, (도시)커먼즈에 대한 권리에는 커먼즈를 공동으로 만들고 재편하는 데 참여할 권리뿐만 아니라 커먼즈를 기반으로 생산된 공동의 부를 민주적으로 관리할 권리까지 포함된다.

이상 커먼즈에 대한 다양한 권리들을 녹지 커먼즈에 접목하여 볼 때, 녹지 커먼즈는 상당히 다양한 권리의 묶음으로 드러난다. 가장 쉽게는 녹지 커먼즈를 많은 사람들이 녹지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로 이해할 수 있다. 누구나 녹지를 이용하고 접근할 권리, 녹지로부터 배제되지 않을 권리 등은 개방된 녹지가 사회적으로 충분히 확보되어야 할 근거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지 커먼즈를 접근권, 이용권의 측면에서만 접근할 경우, 녹지를 집합적으로 소유한다는 의미가 근대적 소유권 틀 안에서만 해석되면서 녹지 확보가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다. 녹지 커먼즈는 소유권 측면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으며, 이때 커먼즈에 대한 소유권은 근대적 소유권 제도가 갖는 착취적, 배타적 성격을 극복하는 방향, 공동체의 기본적인 필요와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소유권의 내용과 의미를 새롭게 구성되어야 하는 과제를 가진다.

또 녹지 커먼즈는 참여권, 전유권으로도 구성될 수 있다. 녹지 커먼즈에 대한 참여권, 전유권은 좁게는 녹지를 공동체가 자치적으로 관리할 권리를, 넓게는 공동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녹지를 구성하고 재편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나아가 녹지 커먼즈에서는 커먼즈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공동의 부에 대한 권리도 다룰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녹지를 이용하고 향유하면서 녹지의 가치는 증가한다. 이와 같은 녹지

커먼즈를 기반으로 한 공동의 부를 누가 어떻게 이용하는가? 가령, 녹지 인근에 ‘그린 프리미엄’ 혹은 ‘숲세권’이 형성되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녹지 커먼즈를 기반으로 생성된 공동의 부가 자본에 흡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문제는 녹지 커먼즈를 이용권과 접근권에 한정하여 볼 경우 간과되기 쉽다. 녹지 커먼즈에 대해 공동체가 갖는 권리는 녹지 커먼즈에서 창출되는 공동의 부를 집합적으로 소유할 권리도 포함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다.

나. 커먼즈와 외부의 관계

녹지 커먼즈에 대한 공동체의 보편적 접근이나 자치적 관리에 집중할 경우, 녹지 커먼즈와 그 외부의 관계가 가지는 다양한 의미를 놓칠 수 있다. 지역 공동체에게 개방되어 있거나 자치적 관리가 가능한 녹지 커먼즈가 형성·유지되는 것의 의미는 커먼즈 내부 동학만으로는 설명되기 어렵고, 커먼즈 외부와의 관계 속에서 보다 선명하게 드러난다.

예컨대 서울의 ‘경의선숲길공원’은 지상 철도였던 경의선이 지하화되면서 지상 부지에 형성된 녹지이다. 2000년대 초반 폐선 부지에 대한 공원화 계획이 진행되었으며, 2016년 도심을 가로지르는 약 6km의 ‘경의선숲길공원’이 완공되었다. ‘경의선숲길공원’ 조성에는 시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참여의 영역이 제한적이더라도) 시민 참여를 통해 공원 조성이 이루어졌다. ‘경의선숲길공원’은 누구나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녹지이자 시민 참여를 통해 조성된 녹지라는 의미에서 녹지 커먼즈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경의선숲길공원’ 조성은 공원이 지나는 가좌역, 홍대입구역, 서강대역, 공덕역, 공덕역 연변 부지, 효창공원역 등 역 주변의 역세권 개발 계획과 함께 진행되었다(서울시, 2009). 이때 지역의 행정 관료, 선출직 의원, 주택 소유주 등으로 구성된 ‘성장 연합’은 경의선 폐선 지상 부지의 공원화에 깊게 관여하면서 유휴 부지를 개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대기업이 주도하는 민자 복합 역사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경의선숲길공원’ 인근 지가는 급격히 상승하였다(김보경, 2020). 커먼즈로서 ‘경의선숲길공원’의 의미를 시민들의 접근·이용 가능성이나 자치적 관리로 한정할 경우 공원을 매개로 소상공인, 세입자 등 특정 계층의 시민들이 축출되었다는 점, 공원이 자본 축적의 도구로 활용되었다는 점, 공원 형성 과정에서 절대적 소유권에 기반한 성장 연합이 결성되고 투기적 도시화가 가속화되었다는 점 등은 생략된다. 2015년 공덕역 유휴부지에서는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이라는 이름으로 국유재산에 대한 대규모·상업적 개발 반대, 국유지의 커먼즈화를 주장하는 커먼즈 운동이 본격화 되었는데(박인권 외, 2019; 김보경, 2020), 이는 녹지 커먼즈의 의미를 커먼즈 내부 동학에서만 찾을 수 없으며 녹지 커먼즈와 외부가 맺는 관계, 녹지 커먼즈의 정치적·역사적 맥락들 속에서 검토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커먼즈와 외부의 관계에 무관심한 자유주의 커먼즈론은 녹지 커먼즈에 대한 공동체의 자치적 관리의 성공 여부로 녹지 커먼즈를 바라보기에 커먼즈의 의미를 협소하게 만든다. 또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의 협력으로 녹지 커먼즈를 만들 수 있다고 보는 사민주의적 접근은 한편에서 ‘경

의선숲길공원'과 같은 녹지 커먼즈를 만들어내는 성과를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인근의 특정 계층을 축출하면서 착취적 소유권 제도를 유지·재생산하고, 녹지 커먼즈를 자본 축적의 순환 속으로 흡수할 수 있어 위험하다. 녹지 커먼즈는 녹지 자체만이 아니라 녹지를 둘러싼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체계 등 외부와의 관계 속에서 커먼즈화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V. 요약 및 결론

커먼즈론은 현 체계의 전환 내지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는 데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커먼즈론은 대체로 국가/시장 이분법의 근거한 해결책에 의존할 경우 현 체계의 사회-생태적 지속불가능성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면서 커먼즈/공동체 기반의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 커먼즈론의 갈래마다 커먼즈를 조금씩 다르게 해석하고 있지만 사회-생태적으로 지속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계를 커먼즈를 기반으로 개선하거나 변혁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타 전환 담론에 비하여 커먼즈론이 갖는 강점은 공동체의 기본적인 필요나 생존에 필수적인 것들, 공동체의 자유로운 발전에 기여하는 것들이 사라지는 문제와, 그것들을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문제에 대하여 공동체 중심의 능동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이다. 이는 현 시스템의 전환을 이끄는 주요한 힘으로서 집합적, 정치적 실천에 주목한다는 의미가 있다. 커먼즈에 필연적으로 포함되는 개념인 ‘커머닝’과 그 주체로서 ‘커머너’는 커먼즈가 ‘이미 거기에 있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커머너 공동체의 지속적, 집합적인 커머닝 활동을 통해 생산된 사회적 산물이라는 점을 상기시킴으로써 공동체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측면을 부각시킨다. 커먼즈론은 국가나 시장의 의존하는 전환이 아니라 공동체의 집합적 힘을 통한 전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갈래의 커먼즈 이론을 살펴보면서 전환 담론으로서 갖는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하고,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중 대기 관리와 녹지 확보 문제에 대한 이론적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대기 커먼즈’와 ‘녹지 커먼즈’ 개념을 고찰함으로써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커먼즈 이론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커먼즈 이론은 커먼즈의 작동방식을 기술하고자 하는지, 커먼즈를 통해 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지, 체계를 변혁하고자 하는지 등에 따라 기술적, 수정적, 변혁적 패러다임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각각이 커먼즈, 국가, 시장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다시 세부적으로 구분된다.

먼저 커먼즈에 대한 기술적 연구 패러다임에는 커먼즈 비극론, 커먼즈 드라마론, 커먼즈 이중운동론 등이 있다. 커먼즈 비극론은 커먼즈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기에 과도이용과 무임승차 문제로 커먼즈가 비극에 이를 것이라고 보는 관점, 커먼즈 드라마론은 커먼즈가 무조건 비극이나 희극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드라마를 형성한다는 관점이다. 커먼즈 이중운동론은 커먼즈의 내적 동학 보다는 커먼즈를 국가, 시장과의 긴장 속에서 설명하려는 흐름이다.

커먼즈 비극론은 커먼즈의 지속불가능의 원인을 자원의 희소성과 과도이용으로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을 둘러싼 정치경제적 맥락을 설명하기 어려운 틀로 보여지며, 커먼즈 드라마론은 공동체 내부에 충분한 자치 역량이 있다는 점을 조명하는 담론으로는 유효하지만, 커먼즈 내부 동학에 집중하다보니 커먼즈와 외부의 관계에 무관심하여 커먼즈화/탈커먼즈화의 구조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그에 비해 커먼즈 이중운동론은 커먼즈를 다

양한 사회적 힘 관계 속에서 바라보면서 커먼즈화/탈커먼즈화의 매커니즘을 설명하므로, 커먼즈를 통한 전환에 있어서 어떤 경로와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지 등을 다양한 맥락과 스케일에서 논의하는 기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

커먼즈를 통해 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수정적 연구 패러다임에는 자유주의, 공화주의, 시민주의 커먼즈론 등이 있으며, 체계 개혁에 초점을 두는 변혁적 연구 패러다임에는 자율주의적 맑스주의, 자율주의적 패미니즘 커먼즈론 등이 있다. 자유주의 커먼즈론은 커먼즈를 국가, 시장과 병렬적으로 혹은 별도의 영역에서 공존 가능한 제3의 영역으로 본다. 공화주의 커먼즈론은 커먼즈를 국가, 시장과 공존하는 영역에 두지만 커먼즈와 공존하는 국가와 시장의 성격을 변형하고자 한다. 시민주의 커먼즈론도 국가, 시장, 커먼즈의 삼두체제를 구상하지만 P2P(동료 생산) 확대를 핵심 기제로 본다. 자율주의 커먼즈론에서도 시민의 자율적 사회적 생산을 강조하지만 그것이 자본에 흡수되는 것을 경계하는 반면, 시민주의 커먼즈론은 P2P가 자본의 일부를 이루면서도 새로운 체계를 제시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입장을 취한다. 자율주의적 맑스주의 커먼즈론은 커먼즈를 국가와 시장을 넘어서는 자율적 생산 양식으로 본다.

자유주의 커먼즈론은 국가, 시장, 커먼즈의 병렬적 삼분론을 전제하고 커먼즈 내부 영역의 지속가능성만을 이야기하므로 전 영역에 걸친 전환을 이야기하기 힘든 담론으로 보여진다. 특히 자본 축적에 기여하는 상품 생산 커먼즈도 성공적인 커먼즈 거버넌스로 봄으로써 오히려 체계 유지에 일조하는 측면이 있다. 공화주의 커먼즈론은 전환에 있어 국가와 시민의 역할 및 공적 책임을 환기시키기에 중요한 전환 담론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국민국가 영역성에 갇힌 커먼즈를 중심으로 논의하기 때문에 영역 내에서 독자적 매커니즘으로 해결될 수 없는 전환의 문제는 다루기 어렵다. 시민주의 커먼즈론 국가와 시장이 커먼즈와 대립하기 보다는 커먼즈를 지원하는 새로운 모델을 구상하기에 전환의 시대에 새로운 관계성을 모색하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일부 영역에서 국가와 시장이 커먼즈와 협력적으로 공존한다 하더라도, 비협력 영역에서 국가-시장이 주도하는 탈커먼즈화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시민주의 커먼즈론이 이를 묵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자율주의 커먼즈론은 공동체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가장 중요한 전환의 씨앗으로 보기에 국가/시장 접근법과는 다르게 풀뿌리 전환 담론을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율주의 커먼즈론은 전환의 스케일 문제를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공동체의 전환 실험의 스케일을 확대할 것인가의 문제를 남기고 있다.

전환 담론으로서 커먼즈 이론들이 가지는 강점과 한계를 볼 때, 커먼즈론은 국가, 시장, 공동체 등 현 체계의 유지·재생산에 일조하는 많은 개념들의 재구성과 의미 전환을 요청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동체 내부의 자치적 관리에 집중할 경우 공동체의 의미가 협소해 질 수 있으므로 공동체는 외부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가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또 국가와 공동체의 의미를 탈영역적으로 구성하고, 스케일이 확대되거나 다층적인 공동체의 의미를 정교화해야 하는 과제도 존재한다. 나아가 국가, 시장, 공동체의 비협력 영역 혹은 국가, 시장과 공동체가 내적으로 결합하는 영역의 의미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기 커먼즈’와 ‘녹지 커먼즈’를 구상함에 있어서도 유사한 쟁점들이 등장하였다. 대기를 공

동체의 집합적 소유로 볼 경우, 커먼즈가 특정 지역 공동체와 일치하지 않는 현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대기 커먼즈에 대한 가치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등이다. 이 연구에서는 대기 커먼즈와 공동체에 대한 다층적, 관계적 접근을 제안하였다. 대기를 커먼즈로 만드는 공동체가 단일하지 않고 여러 층위와 경계를 가지고 중첩되어 있다고 보는 것, 그리고 그 공동체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또 대기 커먼즈를 어떤 기준으로 가치 판단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기질 개선에 집중할 가능성이 큰 자유주의 접근보다, 대기 커먼즈에 대해 관계적으로 접근하며 가치 판단 기준을 논의할 수 있는 자율주의 접근을 참고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보았다. 대기 커먼즈가 강한 배타성을 띠고 대기오염의 위험을 다른 공동체로 몰아내는 것 ‘커먼즈의 부패’로 보고, 대기-삶들의 기생적·착취적 연결 대신 공생적 연결을 추구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녹지 커먼즈’에서는 커먼즈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커먼즈와 외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등의 쟁점이 부상했다. 가장 쉽게는 많은 사람들이 녹지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로 녹지 커먼즈를 이해할 수 있지만 근대적 소유권 제도가 갖는 착취적, 배타적 성격을 극복하지 못한 채 접근권과 이용권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커먼즈의 의미를 협소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녹지 커먼즈’는 소유권의 내용과 의미를 새롭게 구성해야 하는 과제를 가진다. 또한 ‘녹지 커먼즈’는 녹지를 공동체가 자치적으로 관리할 권리 외에도 공동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녹지를 구성하고 재편할 수 있는 권리, 나아가 녹지 커먼즈를 기반으로 창출되는 공동의 부에 대한 권리 등으로 커먼즈에 대한 권리의 내용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녹지 커먼즈와 외부와의 관계 설정 문제에 대하여 이 연구에서는 커먼즈와 외부와의 관계에 무관심한 자유주의적 접근,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의 협력으로 녹지 커먼즈를 만들 수 있다고 보는 시민주의적 접근 모두 위험하다고 보았다. 공동체의 자치적 관리에 집중하여 녹지 커먼즈의 의미가 축소될 수 있고, 녹지 커먼즈가 자본 축적의 순환 속으로 흡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녹지 커먼즈는 녹지 자체만이 아니라 녹지를 둘러싼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체계 등 외부와의 관계 속에서 커먼즈화하는 방안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커먼즈론은 공동체의 존속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분리하거나 상품화할 수 없는 ‘공동의 것’으로 만듦으로써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중요한 이론적 자원이다. 지속가능/불가능성에 대한 커먼즈론의 접근은 개인화되거나 국가화되고 기술공학적, 거시제도적 문제로서 추상화되었던, 생태적 위기를 포함한 우리 사회 많은 문제들을 공동체 삶의 문제로 되돌려 사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커먼즈론은 단일하지 않고 갈래마다 발전시켜온 사유의 방식과 관점이 상이하므로 각각의 가능성과 한계를 다각도로 살펴보면서 커먼즈에 대한 사유를 보다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전환의 방향을 설정하고 전환 과정을 사회적으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 커먼즈 이론의 접목 지점을 발견하고, 어떻게 커먼즈 이론과 실천을 보완하며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강현수(2010). 도시에 대한 권리: 도시의 주인은 누구인가. 서울: 책세상.
- 국토교통부(2019). 공원일몰제, 우리 지자체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보도자료(2019년 8월 14일).
- 권범철(2017). 현대 도시의 공통재와 재생산의 문제. 공간과사회, 27(2), 119-149.
- 권범철(2019). 도시 공통재의 생산과 전유: 오아시스 프로젝트와 문래예술공단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권범철(2020). 커먼즈의 이론적 지형. 문화/과학, 101, 17-49.
- 김민재, 박순열, 김지혜, 안새롬, 구도완(2018). 지속가능성 전환의 관점에서 본 서울시 정책 평가: '공유도시'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중심으로. 환경사회학연구 ECO, 22(2), 7-40.
- 김보경(2020). 후기 발전주의 시기, 지역 개발 정치가 장소의 공공성에 미친 영향: 경의선 유휴 철도부지 공원화 과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자경(2017). 커먼즈 개념을 통한 마을의 문제 해결 방안에 관한 사례 연구: 제주 금악마을의 양돈 악취문제 해결과정을 중심으로. 로컬리티 인문학, (17), 87-117.
- 박인권, 김진연, 신지연(2019). 도시 커먼즈 관리의 내재적 모순과 도전들: '경의선공유지' 사례를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69, 62-113.
- 박태현, 이병천(2016). '커먼즈'로서 기후시스템과 공공신탁법리: 기후변화소송을 소재로. 법학논총, 40(2), 276-304.
- 박태현, 이병천 (2017). 자연자원의 집합적[또는 공동체적] 관리와 총유제(總有制). 환경사회학연구 ECO, 21(1), 7-39.
- 백영경(2017). 커먼즈와 복지: 사회재생산 위기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위한 시론. 환경사회학연구 ECO, 21(1), 111-143.
- 서울시(2009). 경의선 지상구간 공원조성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 서울시(2018). 2017 서울시 대기질 평가 보고서.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 연구공간L(2012). 자본의 커뮤니티즘 우리의 커뮤니티즘: 공통적인 것의 구성을 위한 에세이. 서울: 난장.
- 윤순진(2002). 전통적인 공유지이용관행의 탐색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모색: 송계의 경험을 중심으로. 환경정책, 10(4), 27-54.
- 윤여일(2017). 강정, 마을에 대한 세 가지 시선. 환경사회학연구 ECO, 21(1), 71-109.
- 윤여일(2018). 축소형 사회의 도래와 현대총유론. 환경사회학연구 ECO, 22(1), 103-136.
- 이병천(2018). 커먼즈론은 공동재산/권을 어떻게 보는가?-세 가지 시선. 시민과세계, 33, 239-262.
- 이병천(2019). 역사 서문: 우자와 히로후미의 사회적 공통자본론, 어떻게 읽을 것인가. 최현이

- 병천·김자경·윤여일 역. 사회적 공통자본의 경제학: 우자와 히로후미의 유고집. 경기: 진인진.
- 이광석(2020). 커먼즈, 다른 삶의 직조를 위하여: ‘피지털’로부터 읽기. 문화/과학, 101, 50-78.
- 이흥균(2000).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에 대한 환경사회학적 비판. 현상과 인식, 24(1-2), 191-211.
- 정영신(2016). 엘리너 오스트롬의 자원관리론을 넘어서: 커먼즈에 대한 정치생태학적 접근을 위하여. 환경사회학연구 ECO, 20(1), 399-442.
- 정영신(2019). 커먼즈론에 입각한 사회변동 연구를 위한 개념적 접근. 최현·장훈교·윤여일·박서현 (편저). 공동자원의 영역들. 경기: 진인진
- 장훈교(2019). 일을 되찾자: 좋은 시간을 위한 공동자원체계의 시각. 나뭇박스.
- 조성찬(2016). 토지가치 공유형 지역자산화 전략의 의미와 한계. 한국도시행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11.
- 최현(2016). 공동자원이란 무엇인가? 최현 외(편). 공동자원의 섬 제주 1: 땅, 물, 바람. 경기: 진인진.
- 최현 외(2016). 공동자원의 섬 제주 1: 땅, 물, 바람. 경기: 진인진.
- 최현·장훈교·윤여일·박서현 편저(2019). 공동자원의 영역들(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공동자원연구총서 10). 경기: 진인진.
- 한상진(2017). 생태사회적 배제: 담론 구성과 대응 전략의 모색. 환경사회학연구 ECO, 21(2), 45-68.
- 한상진(2018). 생태사회적 커먼즈를 향한 성찰과 관련 사례들: 울산의 영남 알프스, 태화강을 중심으로. 환경사회학연구 ECO, 22(2), 77-100.
- 홍덕화(2018). 전환적 사회혁신과 고령사회 대응: 도시 녹색 공유재를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317-348.
- 황인창(2018). 서울시 미세먼지 관리 정책의 성과와 한계. 한국정책학회보, 27(2), 27-50.
- 황진태(2016). 발전주의 도시에서 도시 공유재 개념의 이론적·실천적 전망.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9(2), 1-16.
- 五十嵐敬喜(이가라시 다카요시)(2014). 現代總有論序説. [최현 역(2016). 현대총유론. 진인진].
- 秋道智弥(아키미치 토모야)(2004). コモンズの人類学-文化·歴史·生態. [이선애 역(2007). 자연은 누구의 것인가: 공유에 관한 역사·생태인류학적 연구. 새로운사람들].
- 宇澤弘文(우자와 히로후미)(2005). 社会的共通資本. [이병천 역(2008). 사회적 공통자본: 진보적 공공경제학의 모색. 필맥].
- 宇澤弘文(우자와 히로후미)(2015). 宇澤弘文の経済学-社会的共通資本の論理. [최현·이병천·김자경·윤여일 역(2019). 사회적 공통자본의 경제학: 우자와 히로후미의 유고집. 경기: 진인진].

- Bauwens, M. (2006). The Political Economy of Peer Production. *post-autistic economics review*, 37(3), 33-44. [미셸 바우웬스. P2P 생산의 정치경제학. *윤자형·황규환 역*(2018). 네트워크 사회와 협력 경제를 위한 미래 시나리오. 갈무리].
- Bauwens, M. (2009). Class and Capital in peer production. *Capital&Class*, 33(1), 121-141. [미셸 바우웬스. P2P 생산 속 계급과 자본. *윤자형·황규환 역*(2018). 네트워크 사회와 협력 경제를 위한 미래 시나리오. 갈무리].
- Bauwens, M. & Kostakis, V. (2014). [윤자형·황규환 역(2018). 네트워크 사회와 협력 경제를 위한 미래 시나리오. 갈무리].
- Bauwens, M. Kostakis, V., Troncoso, S., & Utratel, A. M. (2017). *Commons Transition and P2P: A Primer*. P2P Foundation.
- Bollier, D. (2014). *Think Like a Commoner: A Short Introduction to the Life of the Commons*. [배수현 역(2015). 공유인으로 사고하라. 서울: 갈무리].
- Bollier, D. (2016). *Commoning as a Transformative Social Paradigm*.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3.0 License.
- Capra, F. & Mattei, U. (2015). *The Ecology of Law*. [박태현·김영준 역(2019). 최후의 전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커먼즈와 생태법.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 Caffentzis, G. (2004). A tale of two conferences: Globalization, the crisis of neoliberalism and question of the commons. *Centre for Global Justice*.
- Caffentzis, G., & Federici, S. (2014). Commons against and beyond capitalism.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49(suppl_1), i92-i105.
- Capra, F. & Mattei, U. (2015). *The Ecology of Law*. [박태현·김영준 역(2019). 최후의 전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커먼즈와 생태법.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 Dawney, L., Kirwan, S. & Brigstocke, J. (2016). Introduction: the promise of the commons. Kirwan, S. et al. (eds.). *Space, Power, and the Commons*. Routledge. pp. 133-139.
- De Angelis, M. (2006). *The Beginning of History: Value Struggles and Global Capital*. [권범철 역(2019). 역사의 시작: 가치 투쟁과 전 지구적 자본. 서울: 갈무리].
- De Angelis, M. (2009). The tragedy of the capitalist commons. *Turbulence*, 5, 32-33.
- De Angelis, M. (2017). *Omnia Sunt Communia: Principles for the Transition to Postcapitalism*. London: Zed Books.
- Federici, S. (2012). *Revolution at Point Zero: Housework, Reproduction and Feminist Struggle*. [황성원 역(2013). 혁명의 영점: 가사노동, 재생산, 여성주의 투쟁. 서울: 갈무리].
- Goldman, M. (Ed.). (1998). *Privatizing Nature: Political Struggles for the Global Commons*. London: Pluto Press.
- Hart, M. & Negri, A. (2009). *Commonwealth*. [정남영·윤영광 역(2014). 공통체. 경기: 사월

- 의책].
- Harvey, D. (2012). *Rebel Cities*. [한상연 역(2014). *반란의 도시: 도시에 대한 권리에서 점령 운동까지*. 서울: 에이도스].
- Hollender, R. (2016). A Politics of the Commons or Commoning the Political? Distinct Possibilities for Post-Capitalist Transformation. *Spectra*, 5(1). DOI: <http://doi.org/10.21061/spectra.v5i1.351>
- Jeong, Y. S. (2018a). Introduction: The Growth of the Commons Paradigm and New Directions in the Study of Social Changes. *Development and Society*, 47(2): 159-168.
- Jeong, Y. S. (2018b). From Decommonisation to Re-commonisation. *Development and Society*, 47(2), 169-194.
- Linebaugh, P. (2008). *The Magna Carta Manifesto*. [정남영 역(2012). *마그나카르타 선언*. 서울: 갈무리].
- McGinnis, M., & Ostrom, E. (1996). Design principles for local and global commons. *The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2, 465-493.
- McGinnis, M. D., & Ostrom, E. (2014). Social-ecological system framework initial changes and continuing challenges. *Ecology and Society*, 19(2), 30.
- Ostrom, E. (1990). *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윤홍근·안도경 역(2010). *공유의 비극을 넘어: 공유자원 관리를 위한 제도의 진화*. 알에이치코리아].
- Ostrom, E. (2009). A general framework for analyzing sustainability of social-ecological systems. *Science*, 325(5939), 419-422.
- Ostrom, E. (2010). Beyond markets and states: polycentric governance of complex economic systems. *American economic review*, 100(3), 641-72.
- Ostrom, E., T. Dietz, N. Dolšak, P. C. Stern, S. Stonish, & E. U. Weber. (eds.). (2002). *The Drama of the Commons*. National Academy Press.
- Papadimitropoulos, V. (2017). The politics of the commons: Reform or revolt? *tripleC: Communication, Capitalism & Critique*. Open Access Journal for a Global Sustainable Information Society, 15(2), 563-581.
- Parker, P. & Johansson, M. (2012). Challenges and potentials in collaborative management of urban commons. In D. Modic, A. Kovacic, T. Besednjak Valic, U. Lamut and G. Rinzivillo (eds.), *Multi-Faceted Nature of Collaboration in the Contemporary World*. Vega Press.
- Ronfeldt, D. & Arquilla, J. (2018). *The Continuing Promise of the Noösphere and Noöpolitik: Twenty Years After*. Available at SSRN: <https://ssrn.com/abstract=3259425>
- Rowe, J. (2010). 협력을 위한 새로운 용어가 필요하다. In Waljasper, J. (ed.). (2010). *All*

That We Share. [박현주 역(2013). 우리가 공유하는 모든 것. 서울: 검동소].

Torres, G. (2001). Who Owns the Sky? Seventh Annual Lloyd K. Garrison Lecture on Environmental Law. Pace Environmental Law Review, 18, 227-286.

Voß, J. P., Newig, J., Kastens, B., Monstadt, J., & Nölting, B. (2007). Steer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 typology of problems and strategies with respect to ambivalence, uncertainty and distributed power.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 Planning, 9(3-4), 193-212.

-기사·보도자료-

경향신문(2016.12.15.). 서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지상은 생태공원 조성.

동아일보(1985.03.18.). 지방공단 주변 공해 심각하다.

매일경제(1976.01.23.). 공해업소의 이전.

매일경제(2014.01.20.). 키즈카페 어린왕자 “미세먼지 걱정 없어요”.

머니투데이(2018.10.24.). 수소경제에 눈뜬 서울시...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기폭제 된다.

비에스투데이(2018.05.29.). 미세먼지에 대처하는 'NO터스트족'의 자세...실내놀이터-마스크-클렌징.

서울신문(2017.06.26.). 사업장 대기오염물 배출 '충남 최다': 작년 10만 8708t, 전체의 27%...경남·경북·전남順 뒤이어.

시사주간(2019.06.12.). 영풍 석포제련소 오염. 'PD수첩' 통해 밝혀져.

아주경제(2019.03.07.). 미세먼지 피해 실내로...영화관·키즈카페 카드사용 급증.

충청남도(2018). 충청남도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18~2022).

프레시안(2010.01.07.). 생산기지 해외 이전의 후폭풍, 이미 눈앞에 왔다.

한겨레(2016.12.15.). 땅속으로 파고드는 서울...2026년엔 100만평 지하 도시.

국토교통부(2019). 도로보급률 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207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웹사이트. <https://www.nationaltrust.or.kr/>

안 내 문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 (재)숲과나눔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